

정책연구 2018-28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방안

Suggestions to Support Rural Youths in Gyeonggi-Do

이수행 외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정지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8-28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방안

- 인 쇄 2018년 6월
- 발 행 2018년 6월
- 발 행 인 이영조
- 발 행 처 경기연구원
- 주 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전 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18

I S B N 979-11-8884-865-2 93520



정책건의

□ 젊은 층의 농촌유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농업인재 부족 현상 심화

-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전국 55.5%, 경기도 49.6%에 달한 반면, 40세 미만 농업종사자의 비율은 경기도 2.9%, 전국 2.7%에 불과
 - 마상진(2017)은 40세미만 젊은 농부가 3개 농촌마을 당 1명에 불과하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현재 수준의 1/4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농업 분야에서도 역대부농이 탄생되면서 젊은 층 및 중년층의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창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농업창업을 통한 청년농부의 농촌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
 - 농업의 경영방식이 자본과 기술 위주로 전환되고,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복합화가 확대되면서 농업의 초기투자비용 급증
 - 일반적으로 창업은 “고위험, 고수익”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농업은 “고위험, 평균수익”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실패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 또한 내재
- 농업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농업창업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을 농촌기능 회복 및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청년농부로 육성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청년농부의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한 농업창업 지원 방식 개선 필요

- 농업창업을 통한 청년농부의 육성 방식을 현행의 교육, 훈련, 자금융자 등 위주에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선 필요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창업 지원 유형은 대부분 농업기술교육, 현장체험(선도농가 실습지원 포함), 융자지원, 판로지원 등으로 구성
 - 청년농부의 농촌유입 확대를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과 함께 농업창업의 높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완화, 높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농업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향의 청년농부육성시스템 개선 필요

- 전남 고흥의 사례는 예비농업인의 농업창업에 대한 부담 및 불확실성 완화는 물론 향후 농업창업을 위한 자본 축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전남 고흥군은 은퇴농 혹은 고령농이 소유한 유휴 시설농업시설을 개보수해 예비농업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해 예비농업인이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경험해 본 이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추진
 - 동 사업은 예비농업인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농업창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창업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

□ 경기도형 임대농장사업 도입을 통해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활성화 필요

- 경기도 농업창업지원시스템 체계화 추진
 -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창업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예비농업인이 농업창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농업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준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필요
- 청년농부 육성을 촉진하는 농업창업 임대농장사업 추진 필요
 -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규모(1인당 500평 내외)의 시설 농업 위주의 임대농장사업을 추진해 청년농부 유입 촉진
 - 청년농부 육성 방향은 수도권 소재 인구 비중, 경기도의 지리적 특징 등을 고려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 방안과 경기도내 청년농부 육성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 방안은 농식품부와 연계하고, 간척지 및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경기도내 청년농부 유입을 목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경기도를 4개 내외의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주요 품목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과, 시·군별 은퇴농, 고령농 등이 소유한 유휴 농업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해 추진

■ 키워드 청년농부, 농업창업



차 례

■ 정책건의

■ 제1장 서론 /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제2장 농업인의 인력구조 및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 / 7

- 1. 농업인의 인력구조 현황 및 전망 7
 - 1) 농업인의 인력구조 현황 7
 - 2) 농업인의 인력구조 전망 12
- 2.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 15
 - 1) 농식품부의 청년농부 육성정책 15
 - 2) 경기도의 청년농부 육성정책 28

■ 제3장 청년농부 육성 사례 및 예비농업인 인식조사 / 33

- 1. 국내 청년농부 육성 사례 33
 - 1) 청년 유기농부 육성 프로젝트 33
 - 2) 전남 고흥의 청년창업농장 육성 사업 34
 - 3) 홍성군 ‘젊은 협업농장’ 36
- 2. 해외 청년농부 육성 사례 37
 - 1) 프랑스의 취농지원 정책 37
 - 2) 일본의 취농지원 정책 38
- 3. 예비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44

■ 제4장 경기도 청년농부 농촌정책 지원 방안 / 55

- 1. 청년농부 농촌정책 지원 필요성 55
- 2. 청년농부 농촌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목표 58
 - 1)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잠재력 58
 - 2)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방향 60

| | |
|---|----|
| 3)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 65 |
| 3. 세부추진과제 | 67 |
| 1) 수준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67 |
| 2)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69 |
| 3) 경기도 대표품목 중심의 거점지역별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71 |
| 4) 경기도와 시·군이 연계한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73 |
| 4.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투융자계획 | 74 |
| 1)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투자 타당성 분석 | 74 |
| 2)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사업 투자계획 | 81 |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85

■ 참고문헌 / 89

■ Abstract / 91

■ 표차례

| | |
|--|----|
| <표 2-1>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 경영주 변화 | 10 |
| <표 2-2>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 12 |
| <표 2-3> 농촌 마을, 청년농 분포 | 13 |
| <표 2-4> 전국 청년 농업 경영주 변화 전망 | 14 |
| <표 2-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실적 | 16 |
| <표 2-6>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추이 | 17 |
| <표 2-7>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출금액 | 20 |
| <표 2-8> 영농정착 기술교육 사업규모(2016년) | 23 |
| <표 2-9>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규모(2017년) | 24 |
| <표 2-10>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사업규모(2016년) | 25 |
| <표 3-1> 프랑스 청년취농자보조금 지급 기준 | 37 |
| <표 4-1> 농업창업 장벽 관련 주요 논점 | 55 |
| <표 4-2> 경기도의 농업창업을 통한 청년농부 육성 여건의 SWOT분석 | 59 |

| | |
|---|----|
| <표 4-3> 신규 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특징 | 61 |
| <표 4-4> 농업창업시장의 진입장벽 | 62 |
| <표 4-5>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 66 |
| <표 4-6> 정부의 창업농 지원 정책사업 | 67 |
| <표 4-7>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임차료 및 시설비 추정 | 75 |
| <표 4-8> 경기도 시설채소의 품목별 소득 | 76 |
| <표 4-9> 경기도 시설채소의 평균 소득 | 77 |
| <표 4-10>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 운영비용(2019-2033) | 78 |
| <표 4-11>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 편익(2019-2033) | 79 |
| <표 4-12>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연차별 수지예산표 | 80 |
| <표 4-13>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 81 |
| <표 4-14>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안) | 82 |

■ 그림차례

| | |
|--|----|
| <그림 2-1>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율 | 7 |
| <그림 2-2>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비율 | 7 |
| <그림 2-3>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 8 |
| <그림 2-4>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 8 |
| <그림 2-5> 농업경영주 연령분포 국제비교 | 9 |
| <그림 2-6> 영농후계자 추이 | 10 |
| <그림 2-7> 농업계 졸업생 취업현황 | 10 |
| <그림 2-8> 귀농 가구 추이 | 11 |
| <그림 2-9> 귀농인 애로사항 | 11 |
| <그림 2-10>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 농가수 변화 전망 | 14 |
| <그림 2-11> 경기도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 농가수 변화 전망 | 14 |
| <그림 2-12>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정책 | 19 |
| <그림 2-13>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안) | 21 |
| <그림 2-14>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 26 |
| <그림 2-15> 금산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 27 |
| <그림 2-16> 경기도 창농 팜세어 현황 | 29 |

| | |
|--|----|
| <그림 3-1> 청년 유기농부 육성프로젝트 추진체계 | 34 |
| <그림 3-2> 취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시책 | 39 |
| <그림 3-3>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의 실행체계 및 절차 | 42 |
| <그림 3-4>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귀농하게 된 주요 목적 | 45 |
| <그림 3-5>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귀농을 결정하게 된 주요 계기 | 45 |
| <그림 3-6> 고려하고 있는 귀농의 형태 | 46 |
| <그림 3-7> 예상 귀농시기 | 46 |
| <그림 3-8> 연령별 귀농 지연 사유 | 46 |
| <그림 3-9> 귀농지역 선정 요인 | 47 |
| <그림 3-10> 연령별 귀농 고려 지역 | 47 |
| <그림 3-11> 귀농 시 생산 예정 품목 | 48 |
| <그림 3-12> 품목 선택 이유 | 48 |
| <그림 3-13> 농업창업의 예상 투자금액 | 48 |
| <그림 3-14> 농업창업 자금 조달 방안 | 48 |
| <그림 3-15> 농업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 | 49 |
| <그림 3-16> 경기도 팜셰어 인지도 | 50 |
| <그림 3-17> 팜셰어사업 효과 | 50 |
| <그림 3-18> 시설농업 창업예정 규모 | 50 |
| <그림 3-19> 시설농업 임대농장 필요성 | 50 |
| <그림 3-20> 시설농업시설 임대기간 | 51 |
| <그림 3-21> 시설농업시설 임대조건 | 51 |
| <그림 4-1> 수준별, 단계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 방안 | 68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의 하락세 지속, 도시 위주의 고속성장, UR이후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이농현상 가속화가 지속되고, 젊은 층의 농업 유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미래농업을 책임질 젊은 농업인재 부족 현상 심화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6년 78.2%에서 2016년 63.5%로 하락
 -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전국 55.5%, 경기도 49.6%에 달한 반면, 40세 미만 농업종사자의 비율은 경기도 2.9%, 전국 2.7%에 불과
 - 농가교역조건¹⁾은 UR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 1982년 134.3에서 2015년 104.4로 하락(2010=100으로 지수화해 추정)

- 최근 농업 분야에서도 역대부농이 탄생되면서 젊은 층 및 중년층의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창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 및 중년층이 농업창업을 통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 농업의 경영방식이 자본과 기술 위주로 전환되고,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복합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첨단농업에 기초한 역대부농이 탄생되고 있지만, 높은 초기투자비용 및 기술습득, 경험 등 전제 필요²⁾
 - “할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하는 말은 과거속의 이야기가 된지 오래며, 농업창업이 오히려 도시창업보다 높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환
 - 특히, 농업창업의 경우 도시창업처럼 “고위험, 고수익”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고위험, 평균수익”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실패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 또한 높음.

- 농업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농업창업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고, 농촌기능 회복 및

1) 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X100

2) 역대부농은 첨단기술에 기초한 축산, 시설농업, 승계농업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청년농부 육성 방안 모색 필요

- 본 과제에서는 경기도 농촌지역에 젊은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경기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농업 위주의 체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8년도
- 내용적 범위
 - 농업인의 인력구조 및 전망
 - 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
 - 예비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 국내외 청년농부 육성 사례
 - 경기도 청년농부 농촌 정착 지원 방안

□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주요 청년농부 육성 관련 정책 및 사례 조사
-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젊은 층의 농업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한 정책대안 등 파악
- 젊은 층이 농업창업을 통해 경기도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 발굴

제 2 장

농업인의 인력구조 및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

1. 농업인의 인력구조 현황 및 전망
2.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

제2장

농업인의 인력구조 및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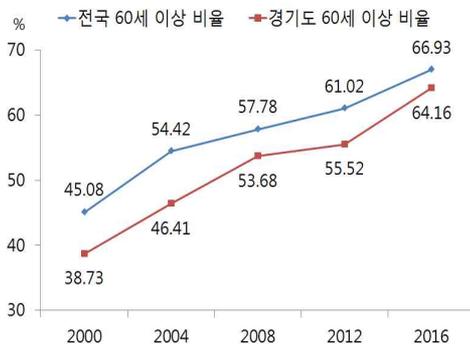
1. 농업인의 인력구조 현황 및 전망

1) 농업인의 인력구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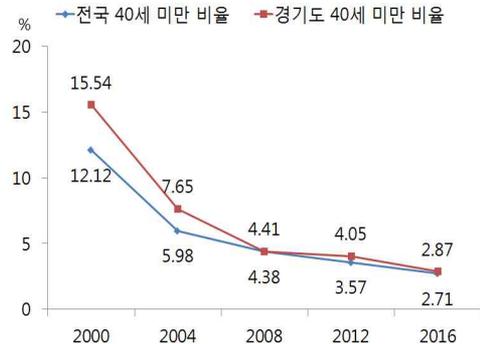
□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심화

- 60세 이상 농업종사자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세 미만 청년층의 영농진입 저조로 미래 농업경영 기반 약화 심화
 -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농업종사자는 전국 2000년 1,155천명(45.1%)에서 2016년 1178천명(66.9%), 동기간 경기도는 2000년 108.6천명(38.7%)에서 2016년 123.9천명(64.2%)로 증가
 -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는 전국 2000년 310.6천명(15.5%)에서 2016년 47.8천명(2.9%), 동기간 경기도는 2000년 43.6천명(12.1%)에서 2016년 5.5천명(2.7%)로 급격하게 감소

<그림 2-1>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율



<그림 2-2>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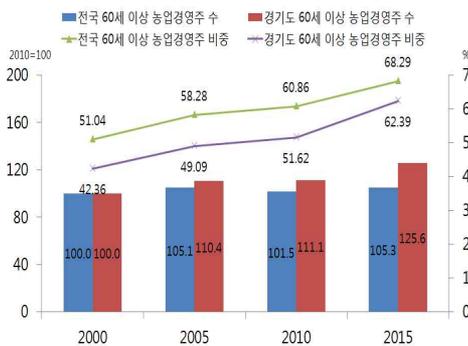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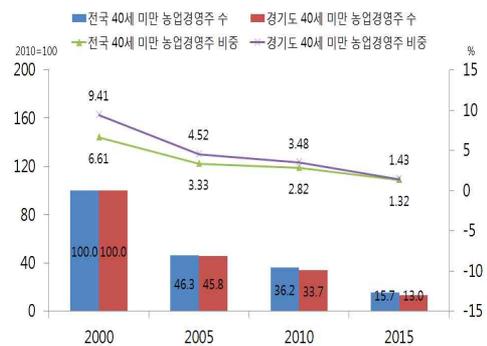
○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수준이 심화되면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현상 또한 심화

- 전국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수(비중)는 2000년 706.1천명(51.0%)에서 2015년 743.3천명(68.3%)으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수(비중)는 2000년 91.5천명(6.61%)에서 2015년 14.4천명(1.32%)으로 감소
- 경기도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수(비중)는 2000년 62.9천명(42.4%)에서 2015년 79.0천명(62.4%)으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수(비중)는 2000년 14.0천명(9.4%) 2015년 1.8천명(1.4%)으로 감소

<그림 2-3>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그림 2-4>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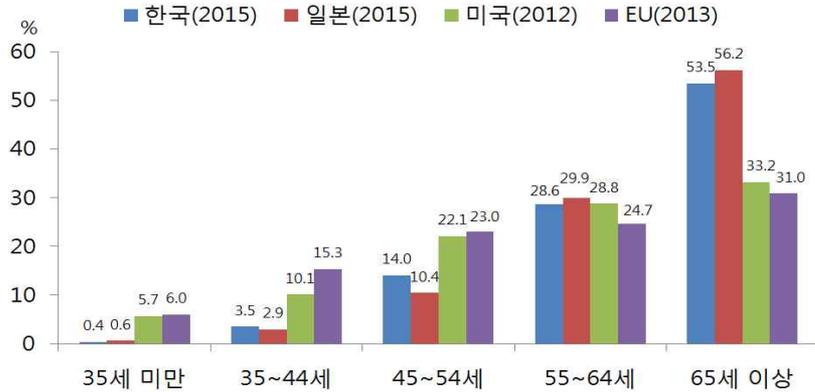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연도), 농업총조사.
 주: 농업경영주 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 주요국 가운데 농업경영주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한국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전체 농업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과 일본은 53.5%와 56.2%(2015년 기준)에 달한 반면, 미국은 33.2%(2012년 기준), EU는 31.0%(2013년 기준)에 불과
- 전체 농업경영주 가운데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경영주의 비중은 동기간 한국이 0.4%로 가장 낮고, 일본은 0.6%, 미국 5.7%, EU 6.0% 등으로 추정

<그림 2-5> 농업경영주 연령분포 국제비교



자료: 통계청(2015), 日本 農林水産省(2015), USDA(2012), EUROSTAT(2013).

재인용: 마상진(2017)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규 농업경영주 가운데 젊은 층의 비중 또한 하락 추세

- 신규로 농업에 진입한 영농경력 5년 미만의 농가경영주 수는 전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큰 폭으로 감소
 - 영농경력 5년 미만 농업경영주 수는 전국 2000년 55,128호에서 2015년 53,284호로 미미한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경기도는 동기간 8,357호에서 4,936호로 크게 감소
-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및 경기도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의 농가경영주 수는 전국 2000년 16,109호에서 2015년 3,543호로 감소하였고, 경기도 또한 2000년 2,283호에서 2015년 336호로 감소
 -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5년 이하 농가경영주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영농경력 5년 이하 농가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의 농가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2000년 29.2%에서 2015년 6.6%, 경기도는 동기간 27.3%에서 6.8%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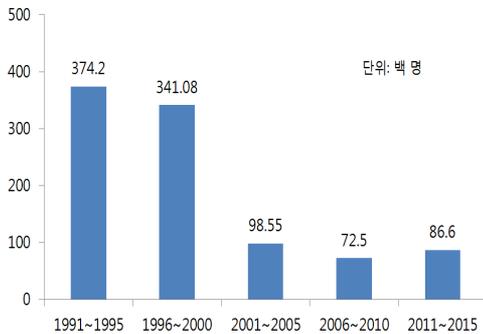
<표 2-1>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 경영주 변화

단위: 가구, %

| 연령대 | 전국 | | | | 경기도 | | | |
|----------|--------|-------|--------|-------|-------|-------|-------|-------|
| | 2000 | | 2015 | | 2000 | | 2015 | |
| | 가구 | 비중 | 가구 | 비중 | 가구 | 비중 | 가구 | 비중 |
| 39세 이하 | 16,109 | 29.2 | 3,543 | 6.6 | 2,283 | 27.3 | 336 | 6.8 |
| 40 - 49세 | 14,267 | 25.9 | 10,907 | 20.4 | 2,397 | 28.7 | 923 | 18.7 |
| 50 - 59세 | 12,766 | 23.2 | 19,810 | 37.1 | 1,965 | 23.5 | 1,935 | 39.2 |
| 60 - 69세 | 9,973 | 18.1 | 15,428 | 28.9 | 1,387 | 16.6 | 1,343 | 27.2 |
| 70세 이상 | 2,013 | 3.7 | 3,696 | 6.9 | 325 | 3.9 | 399 | 8.1 |
| 전체 | 55,128 | 100.0 | 53,384 | 100.0 | 8,357 | 100.0 | 4,936 | 100.0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2-6> 영농후계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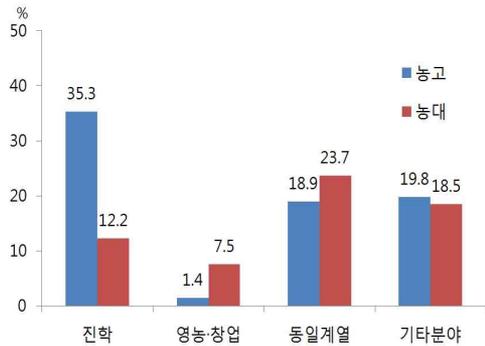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자료: 한국농업교육협회(2015),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2015).

재인용: 마상진(2016),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삼락농정포럼 발제문.

<그림 2-7> 농업계 졸업생 취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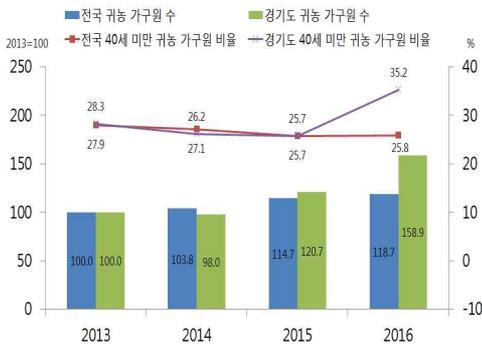
○ 정부가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농후계자 육성사업,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영농취업 등의 성과 또한 약화

- 영농후계자 선정 수가 2000년 이전에는 5년 동안 3만명 이상에 달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1만명 이하로 감소
- 농업계 학교³⁾ 졸업생(2015년 기준) 가운데 취농 비중은 농고의 경우 1.4%, 농대는 7.5%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귀농가구 급증은 농업인 증가에 긍정적이나 초기 정착에 대한 어려움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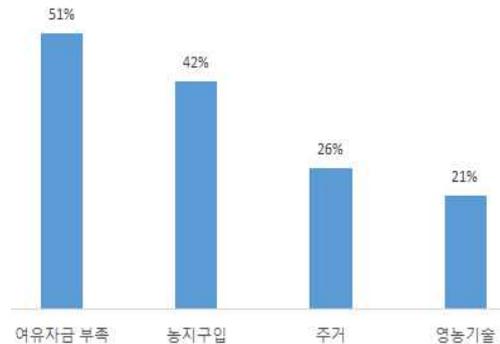
- 귀농 가구원 수가 전국, 경기도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40세 미만의 귀농 가구원 수의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 귀농 가구원 수는 전국 2013년 17,318명에서 2016년 20,559명으로 18.7% 증가, 경기도는 동기간 1,458명에서 2,317명으로 58.9% 증가
 - 귀농가구 가운데 40세 미만 귀농 가구원 수는 전국 2013년 4,834명에서 2016년 5,307명으로 9.8% 증가, 경기도는 동기간 412명에서 816명으로 98.1% 증가
 - 귀농가구 가운데 40세 미만 귀농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2016년 동안 전국은 20% 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2013년 28.3%에서 2016년 35.2%로 크게 증가

<그림 2-8> 귀농 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06.23.)

<그림 2-9> 귀농인 애로사항



- 귀농인은 귀농 초기 가구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생활비를 포함한 여유자금 부족이 농촌정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추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 귀농인의 농촌정착 애로사항은 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등 순⁵⁾

3) 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을 기준으로 2015년 농업계고 63개교에 2만 45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30개 대학에 농산업 관련 학과가 존재하며 2만 9228명이 재학 중에 있음.

4) 마상진(2016).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삼락농정포럼 발제문.

- 마상진(2016)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기초 생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56.1%가 필요하다고 응답⁵⁾
- 한국갤럽이 2016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의 경우 농촌 이주 직후에 가구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영농활동 수행은 물론 주거 등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

〈표 2-2〉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단위: 만원

| 구 분 | | 귀농 직전 연도 | 이주 첫해 | 이주 2년차 | 이주 3년차 | 이주 4년차 | 이주 5년차 |
|------------------|------|----------|--------------------|--------|--------|--------|--------|
| 귀 농 가 구 | 농가소득 | 4,574 | 1,781 (61.1% ↓) | 1,984 | 3,071 | 3,145 | 3,242 |
| | 농업소득 | - | 600 | 644 | 1,523 | 1,666 | 1,853 |
| | 농외소득 | - | 773 | 965 | 693 | 959 | 960 |
| 귀촌 가구 | | 4,108 | 2,496 (39.2% ↓) | 2,585 | 2,976 | 2,988 | - |

자료: 한국갤럽(2016),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재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2.)

2) 농업인의 인력구조 전망

□ 2015년 기준 농촌마을 당 40세 미만 청년농민수가 0.28명으로 감소

- 마상진(2017)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청년농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사회는 농업경영은 물론 농촌마을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
 - 농촌마을 당 40세 미만 청년농가 수는 읍지역의 경우 2005년 1.19명에서 2015년 0.4명으로 감소하였고, 동기간 면지역은 0.88명에서 0.24명으로 감소
- 경기도의 읍·면 지역 청년농이 전국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읍 지역 청년 농가는 전국 2010년 8,742농가에서 2015년 3,501농가로 60% 감소, 경기도는 동기간 1,285농가에서 410농가로 68% 감소
 - 면 지역 청년 농가는 전국 2010년 14,094농가에서 2015년 6,763농가로 52% 감소,

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06.23.)

6) 마상진(2016)외,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기도는 동기간 1,648농가에서 2015년 699농가로 58% 감소

<표 2-3> 농촌 마을, 청년농 분포

| | 마을수(A) | | | 청년농(B) | | | B/A | | |
|----|--------|--------|--------|--------|-------------------|-------------------|------|------|------|
| | 2005 | 2010 | 2015 | 2005 | 2010 | 2015 | 2005 | 2010 | 2015 |
| 읍 | 7,491 | 8,212 | 8,698 | 8,930 | 8,742 (1,285) | 3,501 (410) | 1.19 | 1.06 | 0.40 |
| 면 | 28,043 | 28,286 | 28,094 | 24,548 | 14,094 (1,648) | 6,763 (699) | 0.88 | 0.50 | 0.24 |
| 전체 | 35,534 | 36,498 | 36,792 | 33,478 | 22,836 (2,933) | 10,264 (1,109) | 0.94 | 0.63 | 0.28 |

자료1: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2: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주: ()는 경기도 40세 미만 청년농부 현황임.

□ 현행 추세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경우 청년농 비중은 2015년 대비 1/4로 축소 전망⁷⁾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과거 15년간(2000~2015년)의 신규농가 유입 추세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경우 40세미만 청년농은 2015년 대비 1/4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현행의 신규 유입 농가 변화율이 2025년까지 유지된다면, 40세 미만 청년농 농가는 2015년 14,366호에서 2020년 6,889호, 2025년 3,725호로 축소될 전망
 - 청년농 농가가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1.3%에서 2020년 0.7%, 2025년 0.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추정치 및 전국 대비 경기도 청년농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현행의 청년농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8명의 신규 농업인을 추가로 유입하는 지원정책 추진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행의 청년농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명 내외의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 2015년 기준 전국 대비 경기도 청년농의 비중이 10.8%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현행의 경기도 청년농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8명 내외의 신규 농업인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7)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요약해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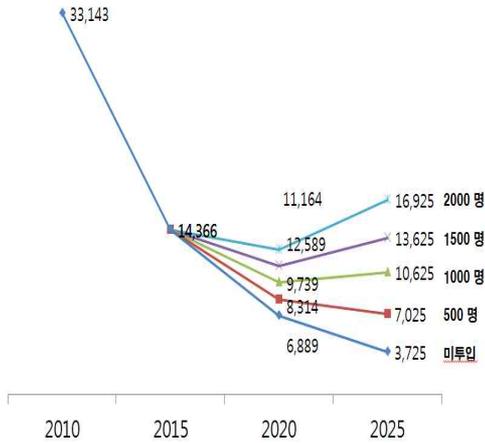
<표 2-4> 전국 청년 농업 경영주 변화 전망

| | 2000 | 2005 | 2010 | 2015 | 전망 | | 변화율(%) | | |
|-----------|--------|--------|--------|--------|--------|-------|--------|-------|-------|
| | | | | | 2020 | 2025 | 15-20 | 20-25 | |
| 연령대 | 20~24세 | 855 | 269 | 115 | 111 | 56 | 33 | -0.68 | -0.52 |
| | 25~29세 | 6,415 | 2,113 | 1,312 | 681 | 394 | 228 | -0.69 | -0.49 |
| | 30~34세 | 23,023 | 10,603 | 5,241 | 3,362 | 1,609 | 955 | -0.65 | -0.50 |
| | 35~39세 | 61,223 | 29,407 | 13,490 | 10,212 | 4,830 | 2,508 | -0.67 | -0.49 |
| 청년농 전체 | 91,516 | 42,392 | 33,143 | 14,366 | 6,889 | 3,725 | -0.66 | -0.50 | |
| 총 농가(천 호) | 1,384 | 1,273 | 1,177 | 1,089 | 1,018 | 967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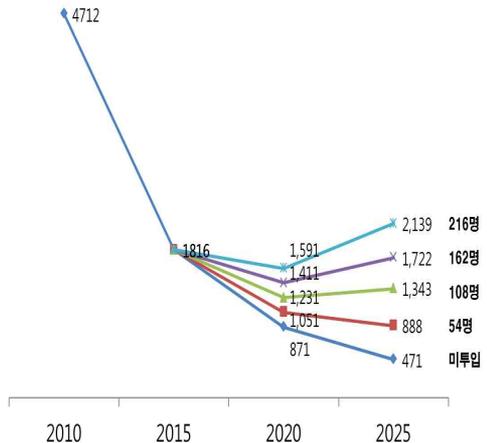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재인용: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10>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 농가수 변화 전망



<그림 2-11> 경기도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 농가수 변화 전망



자료: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경기도 전망치는 2015년 기준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치에 곱하여 추정

2.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

1) 농식품부의 청년농부 육성정책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⁸⁾

□ 사업 연혁

-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농촌인구의 도시유출로 농어촌 후계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1978년부터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을 추진
 -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과학영농을 위한 과제 지원, 영농정착지원, 시범영농지원 등 위주로 추진
 - 1981년에는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제정과 함께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으로 재발족해 추진
 - 1981년 당시 농어민후계자의 연령 제한은 30세 이하였으나, 1982년부터 연령 제한을 35세 미만으로 개정 후 1992년 40세 미만, 2004년 45세 미만, 2013년부터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개정

□ 사업 내용

- 사업목적: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농업인으로 육성
- 사업대상: 18 ~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이하, 농업계 고등학교 혹은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연간 1,800명 수준에서 선정)
-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자금 융자(최대 2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경종농업분야 창업기반 조성 지원: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하우스온실, 과원조성 등) 및 임차, 가공시설, 운영자금(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

8) 국가기록원 농림해양수산, 농어민후계자육성, www.archives.go.kr

- 는 자금, 묘목 및 종자 구입 등) 등
- 축산분야 창업기반 조성 지원: 토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축사신축, 기존시설 개보수, 오페수 처리시설 등) 및 임차, 운영자금(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등

□ 사업 실적

- 1981년부터 2015년까지 140,289명을 선정함. 이 가운데 취소자 28,556명을 제외하고 총 111,733명(영농정착률 79.6%)에게 자금 등 지원

〈표 2-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실적

| 연도 | | 선정인원(명) | 취소인원(명) | 영농 정착률(%) |
|----------|-----------|---------|---------|-----------|
| 기간 평균 | 1981~1990 | 39,012 | 11,231 | 71.2 |
| | 1991~2000 | 69,196 | 10,704 | 84.5 |
| | 2001~2010 | 17,863 | 2,211 | 87.6 |
| | 2011~2015 | 8,660 | 187 | 97.8 |
| 전체 | | 140,289 | 28,556 | 79.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주요통계」에서 정리.

(2) 전문 인력 채용지원 사업

□ 사업 연혁

- 2007년 한국농업전문학교(현재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전문 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까지 10년차 사업 추진
 - 2009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지원 대상을 CEO와 전문 인력으로 구분하고 지원 범위를 경영체 당 2명으로 확대했으며, 평가 단계를 2단계로 축소
 - 2011년 농업인재개발원(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평가 단계를 3단계로 강화
 - 2013년 처음으로 농고·농대생 채용 조항 신설,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원
 - 2014년 농고·농대생을 별도의 채용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

<표 2-6>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

| 연도 | 경영체수 | 예산(계획) | 집행 | 집행률(%) | 경영체당 지원액 |
|------|------|--------|-------|--------|-------------|
| 2007 | 18 | 259 | 257 | 99.1 | 14.3 |
| 2008 | 19 | 274 | 268 | 97.8 | 14.1 |
| 2009 | 50 | 1,000 | 376 | 37.6 | 7.5 |
| 2010 | 72 | 818 | 692 | 84.6 | 9.6 |
| 2011 | 69 | 834 | 582 | 69.8 | 8.4 |
| 2012 | 69 | 800 | 691 | 86.4 | 10.0 |
| 2013 | 73 | 800 | 686 | 85.8 | 9.4 |
| 2014 | 41 | 800 | 323 | 40.4 | 7.9 |
| 2015 | 56 | 800 | 609 | 76.1 | 10.9 |
| 2016 | 79 | 800 | 632 | 79.0 | 8.0 |
| 합계 | 546 | 7,185 | 5,115 | 71.2 | 9.4 |

자료: 국민농업포럼(2016), 2016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내용⁹⁾

- 사업목적: 농업법인 등의 농업경영체가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젊은 인력을 채용하여 창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APC), 농협공동사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농고·농대졸업생의 농업경영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영농경력을 쌓은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APC, RPC, 거점도축장 운영 사업자 중 지원 자격 충족 사업자
- 지원금액: 채용지원금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 분야 및 연차에 따라 1인당 월 18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

9)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 농업경영체 당 1명 신규채용 인력 지원, 다만 농업계 졸업생 채용 시 1명 추가 채용 가능
- 지원기간: 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농업경영체 기준 최대 3년(36개월), 고용된 인력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교체는 1회로 제한
 - 추가채용을 통해 2명을 채용한 경영체는 2명의 지원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 까지 지원

□ 사업 실적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227명에 대해 지원
 - CEO 34명, 전문 인력 170명, 농고·농대생 21명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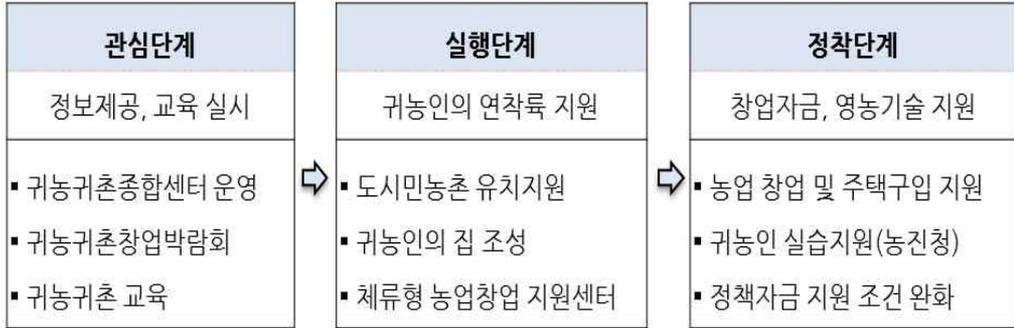
(3) 귀농·귀촌 지원 사업¹⁰⁾

□ 사업 연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귀농·귀촌 지원대책 추진(2009년, 2012년)
 - 2009년: 도시민 일자리 제공,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주민 확보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지원정책 수립
 - 2012년: 귀농·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귀농 2만호 달성)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정책과제 제시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2)' 발표(2016.11.22)
 - 목표: 5년간(20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 주요 사업추진 내용: 귀농·귀촌인을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지원

1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1.)

〈그림 2-12〉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정책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2.)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사업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청년 창업 교육농장 운영, 6차산업 창업 연계 등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 지원
-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품목별·과정별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강화
-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 귀농귀촌 저변 확대: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융화 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융화 프로그램 지원, 귀농 귀촌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

○ 대출 금리: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2%(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한도: 농업창업자금은 세대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사업 실적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2015년 1,000억원 수준으로 증액

<표 2-7>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출금액

| 연도 | 예산 (억원) | 대출 건수(건) | | | 대출 금액(억원) | | | 대출 잔액 |
|------|------------|----------|----------|------|-----------|----------|------|---------------------|
| | | 창업 | 주택 구입 | 합계 | 창업 | 주택 구입 | 합계 | 합계 |
| 2009 | 561 | 193 | 9 | 202 | 104 | 2 | 106 | 64 (2015년 말 기준) |
| 2010 | | 524 | 111 | 635 | 314 | 38 | 352 | 254 (2016년 6월 말 기준) |
| 2011 | 400 | 614 | 213 | 827 | 408 | 76 | 484 | - |
| 2012 | 500 | 705 | 304 | 1009 | 536 | 114 | 650 | |
| 2013 | 600 | 793 | 312 | 1105 | 644 | 113 | 747 | |
| 2014 | 700 | 1035 | 315 | 1350 | 882 | 131 | 1013 | |
| 2015 | 1,000 | 1524 | 283 | 1807 | 1573 | 122 | 1695 | |

주: 예산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금액으로, 연도 중에 증액된 부분은 미반영.
 자료: 김정섭(2016년)외,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¹¹⁾

□ 사업 연혁

○ 2016년 2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추진

- 한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규 인력을 농촌에 유입해 농촌의 노동력 부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2016).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안).

족, 인력기반 확충 등 문제 해결이 목적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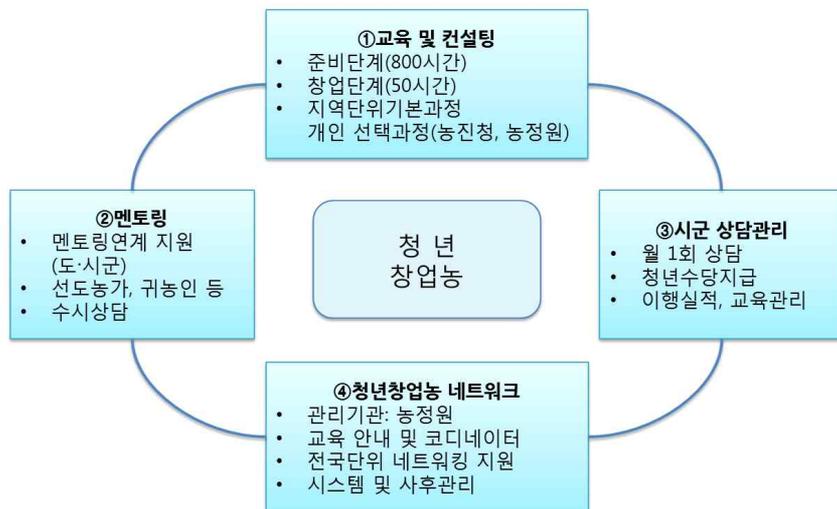
○ 지원 대상

-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내의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
- 창업내용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가공, 유통 등 6차산업 포함 가능

○ 청년 농산업창업농 선정 절차

- 청년창업농이 시·군에 신청하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시군은 배정 인원의 3배 수 내에서 신규 창업농 40%이상을 포함하여 도에 추천
- 도는 창업경진대회 또는 면접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확정¹²⁾

<그림 2-13>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2016).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안).

재인용: 이수행 외(2017).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12) 심사항목은 영농의지, 전문성, 사회성, 사업계획, 영농기반, 창업준비, 재정상태 7개 항목

□ 지원 내용

- 청년창업농이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주거, 도우미 등 지원
 - 준비기간을 포함한 창업기간 동안 최대 월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
- 창업 준비단계
 - 영농창업계획 이행을 위한 사전교육 지원
 - 도(시·군)는 경영 및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육성계획 수립
 - 기존프로그램과 연계,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원
- 창업단계
 - 청년창업농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신규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배 농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링 지원, 청년창업농을 위한 농지·자금·교육 등 지원

(5) 영농정착 기술교육¹³⁾

□ 사업 목적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양성
- 농업현장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신규농업인 및 5년 이내 귀농·귀촌 농가(귀농·귀촌 희망농가)
- 사업 규모: 대상 인원 4,520명, 사업비 1,130백만원

13)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www.returnfarm.com>

<표 2-8> 영농정착 기술교육 사업규모(2016년)

단위: 백만 원/국비, 명

| 구 분 | 합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
| 사업량 | 4,520 | 480 | 600 | 280 | 440 | 440 | 660 | 720 | 480 | 140 | 280 |
| 사업비 | 1,130 | 120 | 150 | 70 | 110 | 110 | 165 | 180 | 120 | 35 | 70 |

자료: 농촌진흥청(2016년). 내부자료.

재인용: 마상진(2017)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교육 방법

- 도 단위(도농업기술원): 도별 광역단위 귀농·귀촌교육 추진
 - 교육 기간: 1~2주
 - 교육 과목: 공통과목(귀농·귀촌), 과정별 전문과목(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 시·군 단위(시·군농업기술센터): 주력작목 중심으로 시·군별 귀농·귀촌교육
 - 교육 기간: 수시(총 40시간 이상)
 - 운영 방법: 영농기술, 영농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경험을 심화시켜 귀농 실천역량 및 자율적 역량 배양을 토대로 일자리창출 기초창업 교육

□ 교육 내용¹⁴⁾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초영농교육·코칭·멘토링
 - 농업기술교육: 농업의 이해, 품목별 농업기술, 농업정보 및 농업기계 활용
 - 농업경영·마케팅·기술창업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기술창업기초, 비즈니스모델(캔버스), 영농설계기법
 - 농촌생활적응 교육: 전통문화 등 생활과학기술교육
 - 귀농자 추수교육: 기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피드백 교육 및 지원 사업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과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역 학습단체 등 지역 리더를 연계한 멘토링 지원

14) 경기농정(2016),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

(6)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¹⁵⁾

□ 사업 목적

-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

□ 사업 내용

- 사업 규모(2016년): 귀농연수자 700명(3~7개월), 2,100백만원(국비)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표 2-9〉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규모(2017년)

| 구 분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
| 사업량(명) | 700 | 7 | 75 | 69 | 72 | 92 | 140 | 128 | 72 | 35 | 10 |
| 사업비 (백만원) | 2,100 | 21 | 225 | 207 | 216 | 276 | 420 | 384 | 216 | 105 | 3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2017)

- 지원 대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단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 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 수당 지원(연수생 1인 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 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해야 함(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교육 운영: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농업법인, 현

15) 농림축산식품부(2017),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

장실습농장(WPL)·농업 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사업 실적

- 선도농가실습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에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귀농인의 영농 정착 및 농촌지역 적응에 기여

(7)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¹⁶⁾

□ 사업 목적

- 귀농 이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과 전문가 창업설계 컨설팅 지원
 - 지방농촌진흥기관(광역 단위)의 특화된 농업기술 인프라와 민간 역량을 연계하여 귀농 창업 생태계 거점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지방농촌진흥기관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하는 자
 -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
- 사업 규모: 6개 농업기술원에 영농창업 교육 및 예비창업 지원금 24억원 지원

<표 2-10>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사업규모(2016년)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 분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사업량 (개소) | 6 | 1 | 1 | 1 | 1 | 1 | 1 |
| 사업비 (백만원) | 2,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자료: 농촌진흥청(2016).

재인용: 마상진(2017)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2018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모집안)

○ 1단계: 도단위 창업교육

- 귀농창업모델 개발과정 , 귀농창업비즈니스 과정, 귀농기술창업 과정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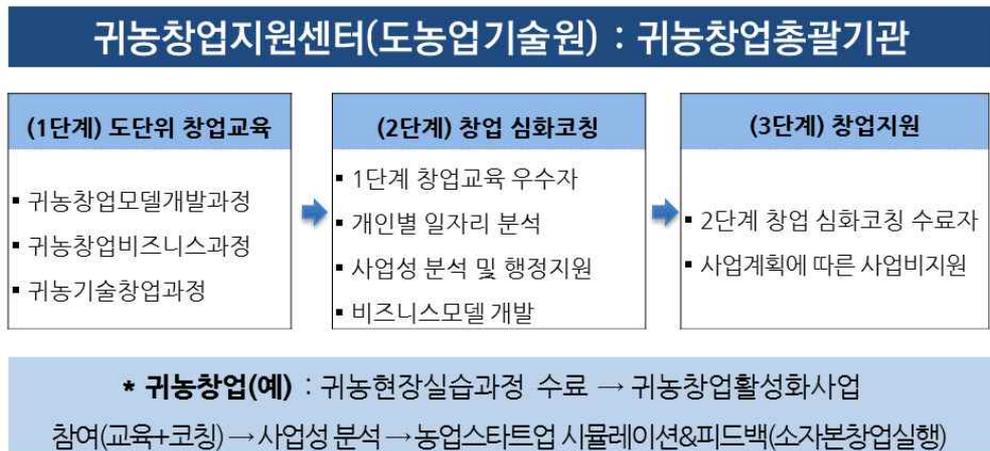
○ 2단계: 창업 심화코칭

- 1단계 교육 대상자 가운데 우수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 개별코칭 지원
- 창업자 개인별 상담, 사업아이템 분석, 최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육

○ 3단계: 창업 지원

- 농업기술원 창업 심화 코칭을 수료한 예비 귀농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 창업자의 역량과 의지, 아이템 등을 심사해 선발
- 귀농창업 우수사례 발굴 및 귀농창업모델 확산
-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창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예비창업 실행비¹⁷⁾ 및 크로스코칭 전문가를 통한 창업 지원

<그림 2-14>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2018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모집안)

17) 귀농창업계획서, 교육참여도, 공모전 선정 등 심사 또는 결과에 따라 지원 판단

(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¹⁸⁾

□ 사업 목적

- 예비 농업인들이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예습,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등을 체험한 이후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Town 형태의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도시민, 귀농 전 예비 농업인 등이 1~2년 기간 동안 주거하면서 창업실습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그림 2-15> 금산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자료: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입주 예정자는 해당 '창업지원센터' 입주 종료 후, 동 권역내의 시·군으로 향후 2년 이내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¹⁹⁾
- 지원 내용²⁰⁾
 - 예비농업인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18)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발췌·수정

19) 정부 또는 지자체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1개월 이상 합숙교육 이수한 자 중에서 선별(사이버 교육은 최대 50시간만 인정)

20)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시·군: 2015년 금산, 제천, 2016년 영주, 홍천, 구례, 2017년 고창, 영천, 함양

-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등) 등을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 재배·포장·마케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주거공간(통나무집 · 황토집 등), 세대별 텃밭(채소, 고구마 등),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등), 실습농장(과수 및 산채 등 특작), 시설하우스, 공동 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쉼터 등 제공

2) 경기도의 청년농부 육성정책²¹⁾

-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정책은 농식품부와 상당부분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
- 다만,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팜셰어사업은 아직 타지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차별화 된 청년농부 육성사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창업유도사업

- 귀농·귀촌 활성화 및 박람회 참가
 -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제공, 귀농·귀촌에 관한 상담 및 홍보 등 추진
 - 지역의 6차산업 육성을 위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기획판매전 등을 운영
-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은 창농이나 귀농 등을 생각하고 농사를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경기도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창업농, 취업농을 위해 현장포럼, 농촌캠프 등을 진행하여 종합적인 체험체계 구축
 - 창업 설계 및 국내 농업선도지 견학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

□ 농업창업 준비 지원사업

- 창농팜셰어
 - 경기도 팜셰어사업은 경기도가 1인당 165㎡의 시설농업 임대농장시설을 마련해 예비창업농이 농업창업 이전에 직접 농업경영을 경험해 본 이후 농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017년 기준 북부권역에 20개동, 남부권역에 20개동 등 총 40개동 운영

21)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http://www.refarmgg.or.kr>

- 경기도는 팜세어사업을 한경대학교, 농협대학교 등 농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연계해 대학교수, 품목별 전문가 등과 1:1멘토 매칭 교육,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등 지원

<그림 2-16> 경기도 창농 팜세어 현황



자료: 한경대 제공자료

○ 귀농닥터 서비스

- 기존 선배 귀농인 및 전문가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희망)자들이 현장 밀착형 정보를 지원 받는 서비스
-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농지 전문가, 재배 전문가, 농업 컨설턴트 등의 귀농닥터들이 지역별로 관련된 지역특색, 품목 등 주요 정보와 현지 안내 제공

제 3 장

청년농부 육성 사례 및 예비농업인 인식조사

1. 국내 청년농부 육성 사례
2. 해외 청년농부 육성 사례
3. 예비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청년농부 육성 사례 및 예비농업인 인식조사

1. 국내 청년농부 육성 사례

1) 청년 유기농부 육성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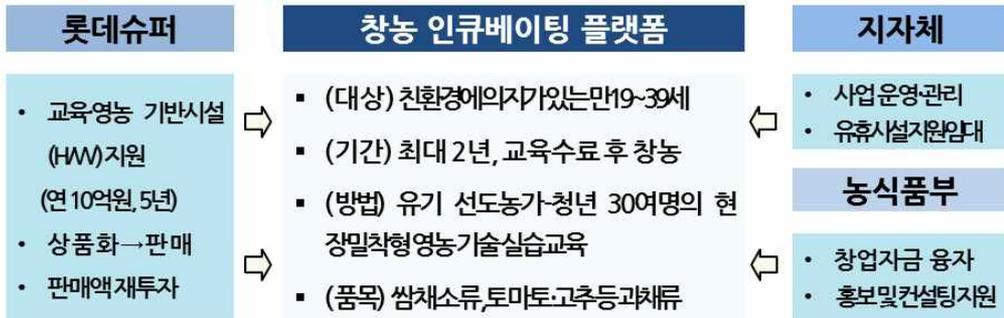
□ 정부, 기업, 농부가 연계된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부-충청남도-롯데슈퍼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유기농부 육성 프로젝트” 추진
 - 롯데슈퍼는 2015년 5월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과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건강한 밥상”을 개발해 2년만에 매출 91억원 달성
 - 롯데슈퍼는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4월 농식품부, 충청남도 등과 함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 사업 내용

- 롯데슈퍼의 자금출연 및 판매지원과 충청남도의 교육 및 정착기반 지원을 통해 「청년 창농+실명제+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추진
 - 롯데슈퍼는 연간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청년농장의 하드웨어 기반 마련 지원
 - 충청남도는 연간 20여명, 5년 간 100여명의 친환경 청년농부를 선발해 육성
 - 롯데슈퍼와 롯데마트는 선발된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자체 브랜드화해 판매

<그림 3-1> 청년 유기농부 육성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4.12.)

2) 전남 고흥의 청년창업농장 육성 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유희농업시설 재활용 및 농업창업 문턱 완화를 통해 청년농부 유입 확대
 -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시설농업을 포함, 방치된 농업시설을 재활용해 청년의 농업창업 유도
 - 청년층(20~40세)의 농산업 취업 기피로 인한 후계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청년층의 농업창업 활성화를 통해 완화
 - 농업창업 초기 농지 및 농업시설물 구입 등 신규 농업창업인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젊은 층의 신규농업인력 유입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력 증진

□ 사업 개요

- 지역내 방치된 시설물(비닐하우스)을 고흥군이 임대한 이후 개보수해 고흥군에 귀농한 예비창업농에게 재임대
 - 사업량: 고흥군이 지역내 방치된 시설하우스 2개소(1,320~1,980㎡ 평 규모) 임대(5년간, 임차료 연간 3백만원 지급)
 - 사업내용: 고흥군은 사업비 50,000천원(개소 당 25,000천원)을 투입해 방치된 시

- 설하우스를 철재를 포함한 내부시설 보강, 비닐교체 등 개보수해 예비창업농에게 재임대
- 계약 주체: 고흥군 ↔ 시설물 소유농가 ↔ 청년창업자
 - 임대 기간: 2년 (재배 작기를 감안한 임대기간 조정)
 - 임대 조건: 사업 종료(2년) 후 영농창업 의무이행
 - 임대료: 무상 (시설물 수리비 등 제반 경비 자부담)
 - 임대 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 의무 부여
- 임대농장 신청 자격: 만 40세 미만으로 다음 조건을 갖춘 자
- 농대·농고(산업고) 졸업생 및 휴학생 중 관내 거주자
 - 경제적 여건 미흡으로 자력 농업창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 신규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 및 청년 귀농인
 - 복합영농 창업을 위한 그룹(2명)구성 신청자, 가족(부부)단위 신청자 가점 부여
- 임대농에게 기존 지원 사업을 활용해 지원
- 사업 기간 중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 연계
 - 사업 완료 이후 지원: 지자체 사업 (농어촌진흥기금, 고흥군 소득지원기금) + 귀농인 영농창업자금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 농지은행
- 지원 내용
- 오이, 딸기 등 시설 고소득 작목 위주로 추진
 - 우선 2년간 정착자에게 시설 지원 + 추가 1년 가능
 - 1년차 임차료는 지자체 지원, 2년차부터 정착자가 지불

□ 주체별 역할

- 농업기술센터: 활용 가능한 시설물(하우스) 확보 및 개보수 임대, 영농교육, 연계사업 추진, 사업종료 후 농장창업 지원, 행정지원(현장 영농기술 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 농가(시설물 소유자), 청년창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목적사업 이행, 영농창업 준비, 생산·홍보·판매활동 등 정보 공유, 시설물소유자(작목반) 선도농가 지정 및 멘토·멘티제 운영

3) 홍성군 ‘젊은 협업농장’²²⁾

□ 추진 배경 및 경과

- 젊은 협업농장은 지역에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
 - 학교에서 유기농업 관련 재배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농촌에 정착하는 것은 학교라는 틀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 현지 교사 가운데 한분이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현장에서 교육이라는 성격을 가진 농장을 설립해 청년의 농촌정착 지원
- 비닐하우스 1개동을 임대해 시작한 이후 점진적으로 규모 확대
 - 2012년 교사 1명과 졸업생 2명이 지역의 유기농 사회적기업(홍성 유기농)이 운영하다 실패한 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연간 100만원 임대료) 농장 시작
 - 2013년 마을 이장의 하우스 3개동 임대, 홍성군의 하우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8개동(동당 200평)(부지는 마을 이장이 지원)으로 확대
 - 2014년 군청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농민, 교사, 지역활동가 등의 출자금 3400만원으로 시작)하고, 농장명칭을 “젊은 협업농장”으로 지음
 - 2018년 현재 농장규모는 시설하우스 1,600평, 논 3,000평, 텃밭 2,000명으로 확대

□ 사업 내용 및 실적

- 교육생은 3개월 견습 기간 후 1년의 인턴과정으로 농업을 배움.
 - 농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점심만 제공하는 3개월 무보수 일을 하며, 그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면 수익을 나누지 않고 지역 차원의 지원금으로 임금을 충당해서 1년간 일을 더 할 수 있음
 - 함께 생활하며 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 습득
 - 단순 농사일보다는 직접 농산물의 포장과 납품 경험, 동네회의 참석 등 실제 농부로서 농촌과 농업 생활 시 필요한 경험 습득

22) 마상진(2017)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4.12.)에서 편집 정리

-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채소들은 흥성유기농영농조합에 7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역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매장, 지역장터, 식당 및 꾸러미 등에 납품
- 1년 과정 이후 교육농장에 남고 싶으면, 먼저 온 사람을 독립시키는 형태로 운영
 - 일정 규모로 농장을 유지하고, 규모 확장과 수익 증대가 협업농장의 목적이 아니라 동 지역에 여러 농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
 - 교육농장을 거친 후 일부는 독립하여 새로운 협업농장을 만들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신입 농업인이 대신하게 됨

2. 해외 청년농부 육성 사례

1) 프랑스의 취농지원 정책²³⁾

□ 청년취농인 보조(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pillar 2)

- 1973년부터 시작해 1995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맞춤형 전문화경영계획서(Personalised Professionalization Plan)를 자격 요건으로 추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민(40세 미만)에게 기본배당으로 8,000~17,300유로 (산간지역은 16,500~35,900유로) 지급
 - 보조금 지급 방식은 지역에 따라 첫해에 전액 지급하거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마지막해에 지급
 - 보조금 지급 후 3년 동안 영농기술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표 3-1〉 프랑스 청년취농자보조금 지급 기준

| | | 평지 | 조건불리 | 산악지 |
|------------------|----|--------|--------|--------|
| Principle Assets | 최저 | 8,000 | 10,300 | 16,500 |
| | 최고 | 17,300 | 22,400 | 35,900 |
| Secondary Assets | 최저 | 4,000 | 5,150 | 8,250 |
| | 최고 | 8,000 | 11,200 | 17,950 |

자료: <http://www.terresdeurope.net/en/young-farmer-s-allowance-france.asp>

재인용: 마상진(2017년)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마상진(2017년)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청년취농인 저리용자(MTS-JA)

- 영농지원을 위해 저리 용자지원
 - 이율은 연리 1%(조건불리지역)~2.5%(평지), 상환기간은 최장 15년
- 용자 상한액은 없으나 토지 구입을 위한 용자는 20,000유로로 제한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의 감독 하에 46,000유로까지 가능

□ 기타 청년취농인 지원

- 소득세, 농업자산 등기세, 재산세 5년간 감면
- 사회보장료 5년간 감액 (1년차 65%, 2년차 55%, 3년차 35%, 4년차 25%, 최종년도 15%)
- 농지은행(SAFER)를 통해 농지 우선 취득 지원
- 농산물 생산할당 및 보상금 수급권에 대한 우선 배분
- 농업보험료 15% 감면, 정부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PDE) 작성비 50% 지원 등

2) 일본의 취농지원 정책²⁴⁾

□ 사업 개요

- 일본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가후계자 부족, 휴경지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청년 취농을 종합적으로 지원
 - 취농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 취농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경영 확립 때까지 체계적인 지원
 - 지원내용은 소득 지원, 교육 지원, 홍보 및 상담, 자금 융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

24) 이수행(2017)외,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서 발췌·수정

<그림 3-2> 취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시책

| | 취농준비 (고교졸업 후 지원) | 취농 시작 | | 경영확립 |
|----------------|--|---|--|--|
| | | 법인 정직원 취농 | 독립·자영 취농 | |
| 소득의 확보 |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 (준비형) 연수기간 중,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교부 | 법인측의 농의 고용사업 농업 법인에 취업한 청년의 훈련 비용을 연간 최대 120만엔을 최장 2년간 조성 |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 (경영개시형) 45세 미만에서 독립적으로 자영하는 인증 신규 취농자에게 연간 최대 150만엔을 최장 5년간 교부 | 농업법인 등의 차세대경영자육성 (농의 고용사업) 법인 등의 직원을 차세대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파견연수비용으로 월 최대 10만엔을 2년간 조성 |
| 기술 경영능력의 습득 | 농업경영자육성교육의 수준향상 취농 희망자 등에게 고급 농업경영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원 | 고용자의 법인 독립을 위한 연수경비로 연간 최대 120만엔을 최장 4년간 조성(3년차 이후는 60만엔) | |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학원의 창출 |
| 취농정착을 향한 과제 해결 | 청년 취농의욕 환기 노력 취농상담회 | 신규 취농인들의 교류회 지원체제 강화 | | |
| 기계·시설의 도입 | | | 청년 취농자금(무이자)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 슈퍼 L자금 |

자료: 농림수산성(2017), 就農を総合的にサポートする国の施策.
 재인용: 이수행(2017)외,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1) 일본의 농업 종사자 인증제도

□ 인증 신규 취농자 제도

- 일본은 취농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별해 농업 시작에서 경영 확립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 신규 취농자 제도 실시
 - 지자체로부터 취농계획을 인증 받은 인증 신규 취농자는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혜택을 제공받음
 - 취농계획은 장래 농업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정촌 기본구상에 비추어 적절성 여부, 취농계획 달성 전망의 확실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 판단
- 사업대상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중·장년층(65세 미만), 상

기자가 인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

○ 지원내용

- 청년 등 취농자금의 무이자 대출, 경영 개시형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 지원,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 농업경영 소득 안정 대책, 농업개량자금의 특례조치 혜택, 농지 관리 사업에 응모 기회 등의 지원 제공

□ 인증 농업인 제도

- 일본은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던 인재를 선별해 경영 감각이 뛰어난 농업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인증 농업인 제도 운영
 - 농업 경영인은 「농업경영 개선계획」을 작성하고, 기초지자체 장은 이를 절차를 통해 인증,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는 인증 농업인에게 농업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경영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2) 농업 인력강화 지원 사업

□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준비형)

- 취농 희망자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기간에 급여형태의 보조금 지급
 - 취농 희망자가 농업대학 등의 농업 경영인 육성기관, 선진 농가 또는 농업 법인에서 1년 이상 취농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엔(1,50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
- 사업대상요건
 - 취농 의지가 강한 45세 미만의 청년 취농자
 - 독립, 자영농, 고용 취농자는 해당 출생지 취농을 목표로 할 것
 - 연수기관, 선진농가, 선진 농업법인에서 연간 1,200시간 이상 연수 실시
 -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됨
 -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기타 기관의 사업(생활보호 대상자, 구직지원제도 등)과 중복해서 교부금을 받지 않아야 함
 - 청년신규 취농자 네트워크인 일농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

○ 지원금 반환원칙

- 적절한 연수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 연수종료 후 1년 이내에 취농하지 않은 경우
- 지원 기간의 1.5배인 최저 2년간 동안 독립, 자영귀농, 고용귀농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 출생지 취농자가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을 상속하지 않거나 법인의 공동경영자가 되지 않은 경우
- 독립, 자영 취농자가 취농 후 5년 이내에 인증 농업인 또는 인증 신규 취농자가 되지 않은 경우

□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경영개시형)

○ 취농 직후 경영 초기에 안정적인 취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기간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

- 경영개시형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은 독립영농을 희망하는 45세 미만 독립·자영 농가에게 최장 5년간 최대 150만엔(1,500만원)을 지원²⁵⁾

○ 사업대상요건

- 45세 미만의 독립, 자영농을 희망하는 인증 신규 취농자
- 청년 취농계획이 기초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조건에 적합할 것
- 상속 취농자의 경우, 지자체에 신규 취농자와 동일한 경영리스크를 감수하는 사실을 인증 받을 것
- 지자체의 인력확보, 농지계획에 부합하는 경영자에 해당 할 것
- 정부, 기타 기관의 생활비 지원사업과 중복교부 불가능
- 농의 고용사업에 의거한 조성금을 받는 농가법인이 아닐 것
- 청년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인 일농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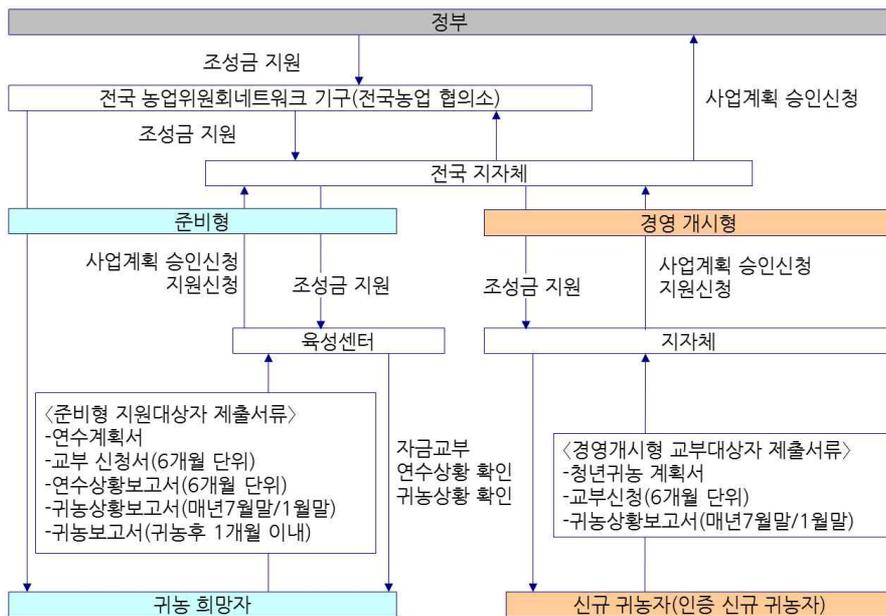
○ 지원금 정지원칙

- 취농자의 전년도 소득이 지원금을 제외하고 350만엔을 넘는 경우

25) 부부가 같이 취농시 1.5인분을 교부, 복수의 신규 취농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경영할 경우 각자에게 교부하는 특례제도 존재

- 취농계획 달성에 의지가 없거나 취농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자체가 판단한 경우
- 3년차 중간평가에서 경영개선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 (반환원칙)친족에게 임대한 농지가 과반인 경우,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그림 3-3〉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의 실행체계 및 절차



자료: 농림수산성(2017), 청년 등 취농 계획 제도에 대해.
 재인용: 이수행(2017)의,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 농의 고용사업

- 농의 고용사업은 취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이 실시하는 연수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실천연수는 3~24개월의 지원기간에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 연수지도 경비²⁶⁾, 지도자 연수 경비²⁷⁾, 취업연수생이 정주자격을 소유한 외국인인 경

26) 교육연수 조성금, 외부강사 초빙 사례금, 여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험료 등

27) 인재육성이나 노무관리 등의 지식습득을 위해 외부지도를 받을 경우 지불하는 사례금 교재비, 교통비 등

우 어학연수비 등 지원

- 농업법인 취업 실천연수: 취농자에게 농업법인이 신규취업, 독립에 필요한 기술, 경영노하우 제공
- 기술, 경영계승 실천연수: 농가나 농업법인이 경영양도를 희망하는 경우, 인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교육
- 재해지역 농업인을 위한 실천연수: 지진 기타 자연재해 지역에서 농업법인이 고용한 농업인에게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교육

○ 파견연수는 연수생 1인당 1개월 1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1인에 한해서 대체직원 인건비를 지원

- 차세대 경영자육성 파견연수: 직원을 농업법인이 국내외의 선진농업법인 또는 다른 업종의 법인에 파견

□ 신규 취농 의욕 환기/상담지원 사업

○ 청년들의 취농의욕을 고취시키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취농 설명회, 강연 등을 실시

- 선진 농업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통해 취농 희망자에게 농업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해 취농의욕을 촉진시키는 사업²⁸⁾, 취농 정보 공개를 통해 농업을 홍보하는 상담체제 정비사업²⁹⁾ 등 시행
- 사업 실행주체는 광역·기초지자체 또는 민간단체³⁰⁾이며 사업 추진 시 고용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전문 인력 경비, 기능인 급여, 사례금, 여비, 기타 경비 등 지원

(3) 농촌창업 금융지원 정책

□ 청년 취농자금

28) 선진 농업경영자에 의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출강수업, 선진 농업경영자, 원예시설 등에 의한 현지연수, 청년 취농희망자 교류회 개최, 광역 지자체 소재의 대학교를 활용한 연수, 기타 청년들의 취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29) 취농정보 공개, 취농희망자 상담(상담창구 개설, 상담회 개최 등), 사전 농업에 관한 적성 확인, 희망 시 단기체험연수 등

30) 취농촉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계획서를 광역지자체에 제출하고 계획서가 지방농정국장의 승인으로 통과되면 1/2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음

○ 신규 농업경영 시작 “인증 신규 취농자”에게 무이자 청년 취농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취농계획 달성에 필요한 사업³¹⁾ 지원
- 농지개량 조성(설비), 농지 임차료
- 시설·기계 취득, 과수·가축 구입/육성비
- 법인 설립비, 사무실·건물 임대비, 고정자산의 취득비 등 기타 경영비용

○ 용자조건

-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원칙, 상환기간은 12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용자 한도액은 3,700만 엔, 특별 인정 시 1억 엔까지 가능

3. 예비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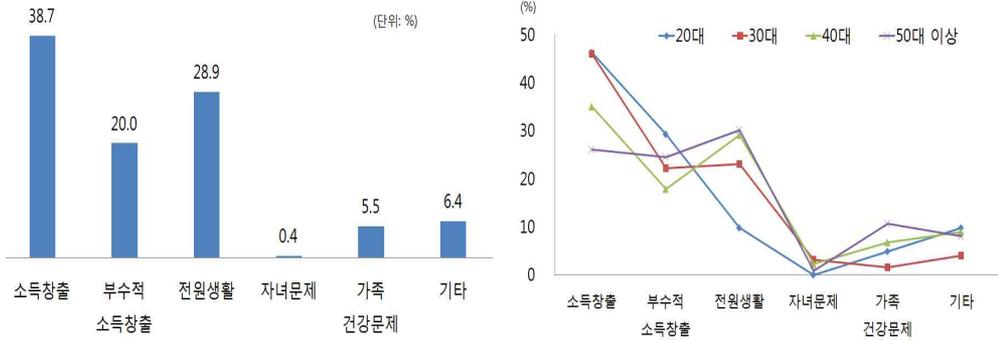
- 조사대상: 최근 2년 이내 전국 단위의 농업 관련 대학, 귀농/귀촌 교육 혹은 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수자
- 조사기간: 2018년 4월 16일 ~ 4월 30일
- 설문회수율: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320부가 회수되었지만,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300개를 표본으로 설정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 5.4%

□ 설문조사 결과

-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귀농하게 된 배경은 소득창출, 전원적인 생활 등
 - 귀농하게 된 배경은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 38.7%, 펜션, 체험활동 등을 통한 부수적 소득창출 20.0% 등 설문응답자 가운데 58.7%가 소득창출이 가장 큰 목적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문제보다는 전원생활, 건강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

31) 특별 용자제도 추진협회의 인증을 받은 경영개선 자금 계획서의 사업에 한함

<그림 3-4>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귀농하게 된 주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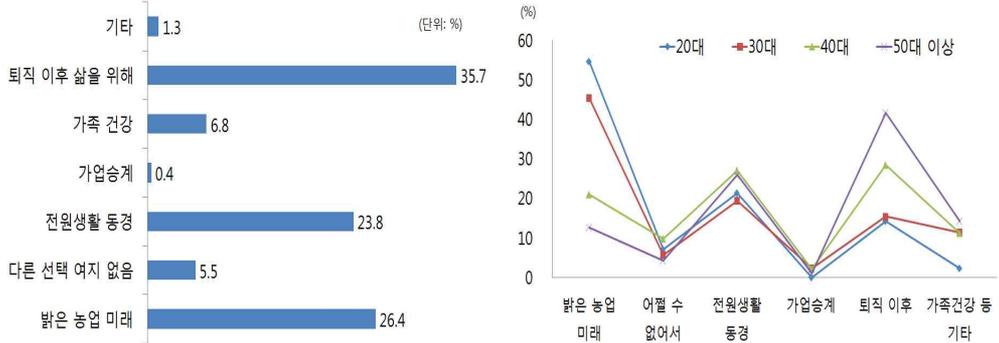


주: 부수적 소득창출은 귀농과 함께 펜션, 체험시설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

○ 귀농을 하게 된 주요 계기는 농업의 밝은 미래, 퇴직 이후의 삶 등임

- 귀농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서가 3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밝은 농업의 미래 26.4%, 전원적인 생활동경 23.8% 등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밝은 농업의 미래 때문에 귀농을 결정하게 된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귀농 결정 비중이 높음.
- 가업승계 때문에 귀농을 결정한 비중은 0.4%로 아주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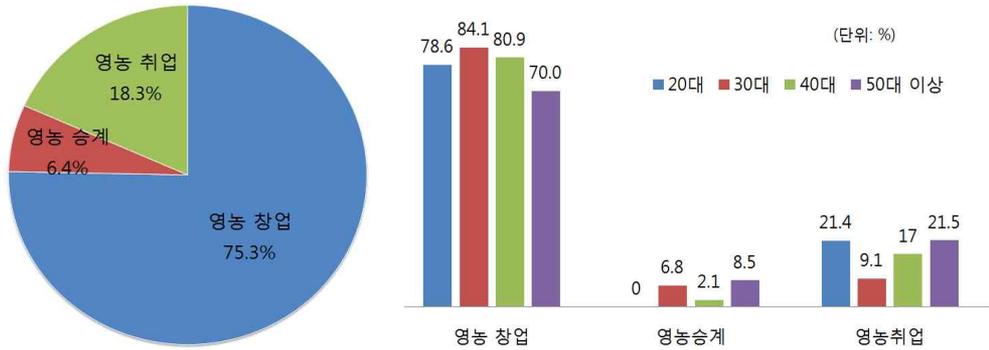
<그림 3-5>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귀농을 결정하게 된 주요 계기



○ 고려하고 있는 귀농의 형태는 농업창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연령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냄.

- 30대와 40대는 농업창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와 50대 이상은 농업 취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6> 고려하고 있는 귀농의 형태



○ 귀농교육을 받았거나 이수하고 있는 예비농업인 가운데 72.3%가 3년 이내에 귀농을 계획하고 있으며, 귀농 지연사유는 연령별로 상이

- 최근 2년 동안 귀농 교육을 이수한 예비농업인 가운데 29.8%는 이미 귀농을 하였으며, 1년 이내에 귀농예정자는 9.4%, 1~3년 이내 귀농예정은 33.2% 등 72.4%가 3년 이내 귀농 예정이라고 응답
- 귀농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20대의 경우 영농 아이템 미확정 및 현장 경험 축적 확대, 30대와 40대는 영농아이템 미확정 및 투자비용 마련, 50대 이상은 퇴직시기가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나타남.

<그림 3-7> 예상 귀농시기



<그림 3-8> 연령별 귀농 지연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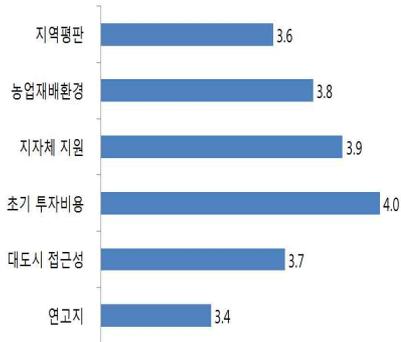
○ 예비농업인이 귀농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초기투자비용이며,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음.

- 5점 척도로 추정한 예비농업인이 귀농지역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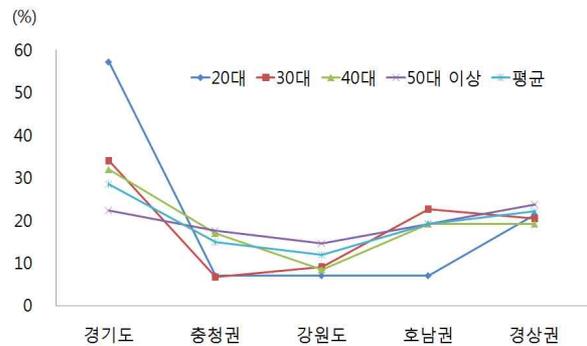
인은 초기투자비용이 4.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지자체 지원 3.9, 농업재배환경 3.8, 대도시 접근성 3.7 등 순으로 조사됨.

- 예비농업인이 고려하는 귀농예정지역으로 경기도가 2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상권 22.1%, 호남권 19.1%, 충청권 14.9% 등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예비귀농지역 선호도는 20대에서 경기도를 선호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상권 및 호남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가 예비귀농지역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게 된 배경은 설문조사 주체가 경기연구원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젊은 층의 대도시 선호현상, 시설농업을 할 경우 투자비용 가운데 토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대적 감소, 소비지와와의 접근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3-9> 귀농지역 선정 요인



<그림 3-10> 연령별 귀농 고려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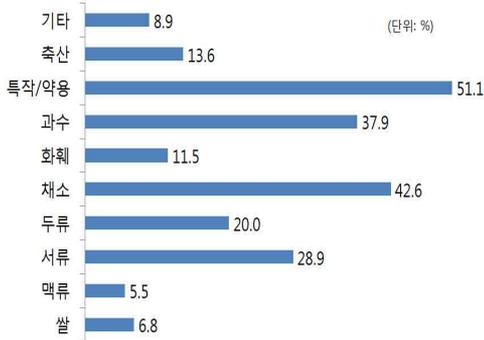


주: 귀농지역을 선정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5점 척도로 분석함.

○ 예비귀농인이 귀농할 경우 고려하는 농업생산 품목은 특작 및 약용작물이 가장 높고, 품목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소득으로 나타남.

- 예비귀농인이 고려하는 농업생산 품목은 특작 및 약용작물 51.1%, 채소 42.6%, 과수 37.9%, 서류 28.9% 등 순으로 조사됨.
- 예비농업인이 품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높은 소득 창출 가능성이 2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계화, 재배난이도 등을 고려한 농업생산의 용이성 23.1%, 기후,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21.0% 등 순으로 조사됨.

<그림 3-11> 귀농 시 생산 예정 품목



<그림 3-12> 품목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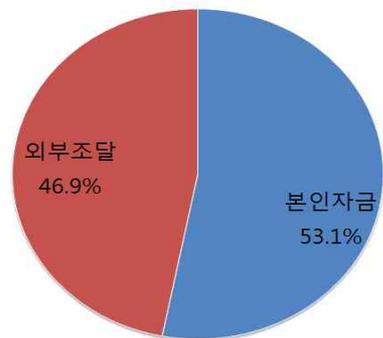
주: 생산 예정 품목은 중복응답 허용, 품목 선택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를 가중평균함.

- 예비농업인은 농업창업의 경우 예상하는 투자금액은 1~2억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3.1%가 본인자금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 귀농해 농업창업을 할 경우 예상하는 투자금액은 20대는 5천만원 미만과 2~3억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와 40대는 5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구간이 높게 조사됨.
 - 농업창업자금의 조달 방법은 젊은 층일수록 외부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자금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조사됨.

<그림 3-13> 농업창업의 예상 투자금액



<그림 3-14> 농업창업 자금 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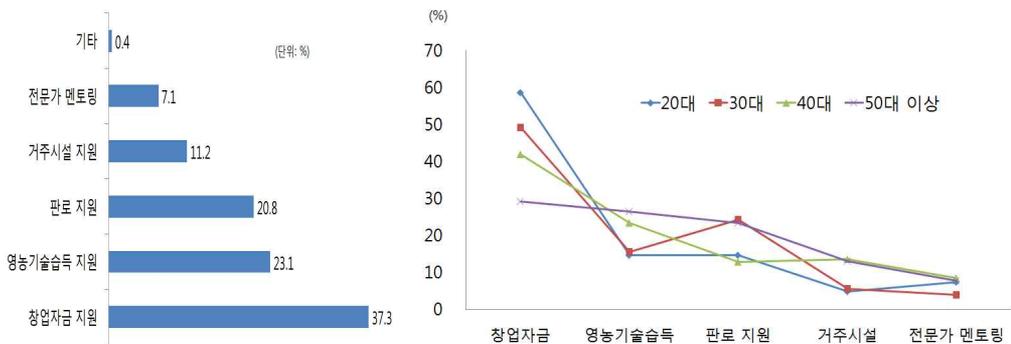
- 예비농업인이 농업창업 이후 예상하는 연간 목표소득은 평균 6,365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 농업창업 이후 연간 목표소득은 20대는 4,428만원, 30대 9,075만원, 40대 8,212만원, 50대 이상 4,989만원으로 조사됨.

○ 예비농업인이 농업창업에 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지원 분야는 창업자금지원으로 조사됨.

- 예비농업인이 농업창업에 할 경우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향은 창업자금지원 37.3%, 영농기술습득지원 23.1%, 판로지원 20.8%, 거주시설지원 11.2% 등 순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영농기술습득지원 및 판로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그림 3-15> 농업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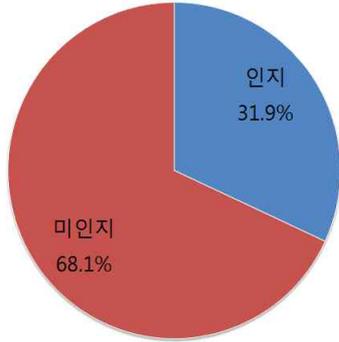
○ 경기도가 농업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팍세어에 대한 인지도는 미흡하지만, 팍세어 참여자들의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팍세어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미인지가 68.1%에 달해 인지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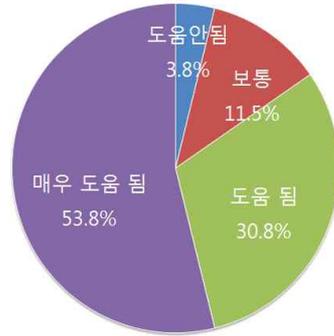
-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경기도 팍세어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6명에 불과해 보다 높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팍세어사업 참여자의 84.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현지조사 결과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아주 높고, 사업 참여자들의 농업창업에 대한 의지 또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 경기도 팜셰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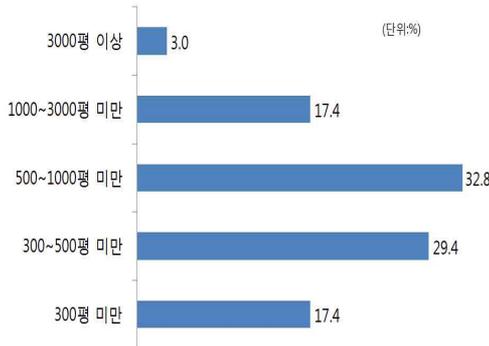


<그림 3-17> 팜셰어사업 효과



- 예비창업농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농업 창업 규모는 500평 내외로 추정되며, 대다수의 예비창업농은 임대농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예비창업농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농업 창업 규모는 500~1,000평 미만이 3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00~500평 미만 29.4%, 300평 미만과 1,000~3,000평 미만이 각각 17.4% 등 순
 - 경기도가 시설농업시설을 구축해 예비창업농에게 임대해 사전적 농업창업을 경험하게 하는 임대농장사업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95.3%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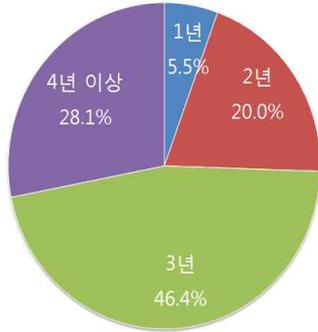
<그림 3-18> 시설농업 창업예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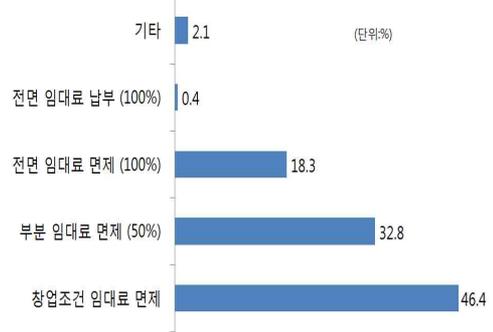
<그림 3-19> 시설농업 임대농장 필요성



<그림 3-20> 시설농업시설 임대기간



<그림 3-21> 시설농업시설 임대조건



- 시설농업시설 임대기간은 농업창업을 전제조건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고, 임대기간은 3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제기됨.
 - 시설농업시설 임대기간에 대한 의견은 3년이 46.4%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은 4년 이상 28.1%, 2년 20.0%, 1년 5.5%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기임대를 선호한 반면, 젊은 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단기임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50.0%에 달한 반면, 30대 이상은 3년이 가장 높게 제시됨.
 - 시설농업시설 임대조건은 농업창업을 전제로 한 임대료 면제가 4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현 시가의 50% 면제 32.8%, 임대료 전면 면제 18.3%로 나타난 반면, 현 시가대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의견은 0.4%에 불과

제 4 장

경기도 청년농부 농촌정착 지원 방안

1. 청년농부 농촌정착 지원 필요성
2. 청년농부 농촌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목표
3. 세부추진과제
4.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투융자계획

제4장

경기도 청년농부 농촌정착 지원 방안

1. 청년농부 농촌정착 지원 필요성

□ 높은 농업창업 문턱 완화

- 농업이 토지와 노동력에 기초한 생산양식에서 자본과 기술에 기초한 생산양식으로 전환되고, 농지가격 또한 농지를 활용한 기대수익 대비 높은 수준 유지 등으로 농업창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
 - 농업경영 방식이 기계화,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확대 등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농업창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 필요시설 설치 등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용 필요
 - 농지가격 또한 농업수익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농지 매입 혹은 임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

<표 4-1> 농업창업 장벽 관련 주요 논점

- Johnson(2001): 기술 및 지식,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 및 시장
- GNFP(2004): 지식/훈련/기술 지원 접근성, 재정지원 접근성, 토지 접근성, 시장접근성
- Reeve와 Stayner(2006): 자본 및 신용 접근성, 토지 접근성, 경작/사육 권리, 학습기회, 시장접근성
- 서규선의(2000): 자금부족 및 영농기반, 영농기술, 농산물 판매, 일손부족 및 주위시선
- 김정호(2005): 경영기반, 영농지식과 기술, 판로 확보, 지역주민과의 관계, 확고한 신념, 영농정보, 가족 및 주변사람지지, 제반환경변화
- 마상진의(2008):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 등

자료: 마상진(2008)외,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부는 농업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농업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 창업자금 융자, 농촌 정착을 위한 주택 및 생활자금 지원 등 지원제도 운영
 - 정부는 농업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촌비즈니스분야 등 농업창업자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³²⁾
 - 이밖에 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청년농산업창업지원제도를 통한 영농기술습득 및 생

32) 일부에서는 담보능력을 포함한 기타 자격요건으로 인해 토지구입 등을 위한 신청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용성이 낮다는 비판적인 주장 제기(Sjbnews.com)

활자금 지원 등 지원제도 시행

-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업창업에 실패할 경우 농업창업의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창업자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처할 가능성 내재
 -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업창업 지원정책은 자금용자(토지, 설비 등 구입 지원), 기술교육, 정착지원 등으로 구성
 - 이러한 창업지원 방식은 농업창업에 실패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농업창업자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처할 가능성 내재
- 농업창업자가 농업창업을 위한 모든 토지, 설비 등을 구입해 창업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시설임대 등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창업 초기투자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실패할 경우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은퇴농의 유휴설비를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농업창업시설을 구축해 임대하는 형태의 농업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농업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농업인 유입 확대

- 농업의 6차산업화,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화 확대 등으로 농업경영 또한 혁신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업과 타산업이 융·복합된 개념으로 농업경영 형태를 기존 농산물 생산 위주에서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다양한 농촌자원과 연계된 체험 및 관광 등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전제 필요
 - 농업의 생산양식이 스마트팜을 포함해 첨단기술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농업인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필요성 확대
- 첨단기술을 응용한 농업생산양식 확대,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 확대 등 미래농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젊은 농업인력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농촌은 오히려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
 -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첨단농법 도입 등 농촌의 혁신적인 활동을 선도하는 인력은 상당부분 귀농·귀촌인, 농업 관련 대학출신 등 도시에서 경영마인드를 습득하였거나 젊은 농업인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전국 55.5%, 경기도 49.6% 등 농가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 농업경

영주 비중은 2000년 전국 6.6%, 경기도 9.4%에서 2015년 전국 1.3%, 경기도 1.4%로 감소

- 미래농업의 발전 및 농촌의 혁신적인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향의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 최근 첨단농법을 활용해 역대부농의 대열에 합류한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젊은 층의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 확대
 - 그러나 농촌에 기반이 없는 젊은 층은 농업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기술교육을 습득하고서도 초기 높은 농업창업 투자비용 부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농업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
 -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젊은 층이 보다 쉽게 농업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농업창업의 내실화

- 농업경영은 생산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현장 경험이 더욱 중요
 - 농업경영은 자신이 습득한 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병해충을 포함한 자연재해 발생, 시장상황의 급변, 판매처 확보 등의 불확실성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농업창업자가 과도한 외부자본에 기초해 농업창업 이후 다양한 유형의 불확실성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실패할 경우 농업창업의 실패는 높은 창업투자비용을 감안할 때 회복불능의 상태에 처할 가능성도 내재³³⁾
-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을 교육, 용자지원, 체험 위주에서 직접 책임지고 농업경영을 해본 이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농업창업에 따른 위험 요인 감소, 농업창업 자금 확보를 통한 자력 창업 기반 강화 등 방안 모색 필요
 - 농업창업 이전에 창업과 유사한 규모로 일정 기간 동안 농업경영을 직접 해 봄으로써 농업경영의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한 농업창업 실패요인 최소화
 - 동 기간 동안 현장의 농업경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농업창업의 종자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³⁴⁾

33) 경기도의 A지역에 퇴직금 및 외부자본 차입을 통해 농업창업을 한 B농가는 새로운 농법의 시설농업을 도입해 농업창업 2년만에 성공적으로 채소류 및 과채류 재배에 성공하였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함.

34) 일부 농업경영체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최소규모(일반적인 시설농업의

2. 청년농부 농촌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목표

1)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잠재력

□ 강점(S)

- 경기도는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위치해 높은 시장 접근성 보유하고 있어 예비농업인이 농업창업 이후 판로개척 및 시장 확대를 통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 보유
- 농진청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대학,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농업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기능을 구축하고 있어 수도권 예비농업인이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 가능

□ 약점(W)

-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높은 도시화에 따른 지가(地價) 상승이 젊은 신규 농업인의 농업창업을 제약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농촌인구의 감소세 지속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단기 노동인력 수급 상황 악화는 기계화 수준이 낮은 분야의 농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기회(O)

-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가 확대되면서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농업의 기계화 수준 및 농업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젊은 인력의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 확대
-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업 분야의 새로운 젊은 인력 유입을 통한 농업발전 촉진 등 차원에서 농업창업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지원정책 추진

경우 300~500평)의 농업경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3,000만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위협(T)

- 최근 귀농/귀촌 확대와 함께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수도권 다수의 지자체 또한 신규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농업창업 지원 정책 추진
-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저가 농산물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업경영환경 악화 지속
-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병해충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 확대, 농산물 재배 적지 변경 등으로 농업경영의 불확실성 확대

〈표 4-2〉 경기도의 농업창업을 통한 청년농부 육성 여건의 SWOT분석

| | | 강점(S) | 약점(W) |
|---------------|---|---|---------------------------------|
| | | 높은 시장 접근성 우수한 교육기반 높은 발전 잠재력 | 높은 진입장벽 높은 도시화 단기 노동인력 수급 |
| 기 회 (O) | ·정부의 높은 관심 ·미래산업 발전 가능성 ·농업의 기계화 확대 | <발전방향> • 체계적인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농업창업 진입장벽 완화 • 첨단시설과 연계한 농업창업 기회 확대 • 농업R&D기관, 농업 관련 대학 등과 연계된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작목반 등과 연계된 농업창업 기반 확대 | |
| 위 협 (T) | ·타지자체와 경쟁 심화 ·농산물 수입 확대 ·농업경영 불확실성 확대 | | |

□ 발전방향

-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귀농/귀촌 및 농업창업 교육기관 확대
 -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을 수준별로 체계화 한 “수준별 맞춤형 청년농부육성시스템” 구축 필요
- 농업창업 진입장벽 완화

-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민 및 젊은 인력의 농업경영에 대한 높은 불안감 내재
 - 농업경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았어도 높은 지가(地價) 및 농업시설 비용 등으로 높은 농업창업 진입장벽 내재
 -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과 함께 농업창업의 문턱(비용)을 완화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창업 진입장벽 완화
- 첨단시설과 연계한 농업창업 기회 확대
 - 농촌의 단기 노동인력 수급이 갈수록 악화되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저가농산물 유입 확대로 농업경영 환경 악화 지속
 -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첨단시설과 연계한 농업창업 기회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 촉진
- 농업 관련 R&D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한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신규 농업인이 다양한 유형의 농업창업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이후 농업창업을 하더라도 농업에 내재된 다양한 유형의 불확실성 위험(각종 병해충, 냉해 등)에 노출될 가능성 내재
 -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생산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
 - 각종 유형의 불확실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농업생산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 관련 R&D 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된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의 작목반 등과 연계된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농업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조직화, 규모화 방향으로 발전
 - 신규 농업인을 지역의 작목반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 실패 위험 최소화

2)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방향

□ 농업창업 단계별 체계적인 원클릭 맞춤형 농업창업지원시스템 구축

-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농업 관련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전문 인력 채용지원 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청년 농산
업창업 지원 사업,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농업창업 관련 지
원 사업 추진³⁵⁾

○ 농업창업 시장에 진입하였거나 진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수
준별 체계화 된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Johnson(2001) 등은 신규농업인에 대한 단계별 특징을 잠재기, 탐색기, 계획기, 개
시기, 재구조기, 정착기 등으로 구분해 설명
- 농업창업시장에 진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수준별,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표 4-3> 신규 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특징

| 단계구분 | | 주요 특징 |
|--------|------|---|
| 예 비 | 잠재기 | - 농업에 대한 흥미, 적성 등이 있다고 판단,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음 - 교양과목 등 형태로 농업과목 이수 혹은 농가 출신자 |
| | 탐색기 | - 농업을 자신으로 직업으로 선택할 것인지 탐색 |
| | 계획기 | - 농업인이 되기 위해 관련 교육 이수 등 제반사항 준비 |
| 초 보 | 개시기 | -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농업인 |
| | 재구조기 | - 영농경력 4~10년 정도의 농업인으로 영농구상 재조정 및 재구조화 추진 |
| | 정착기 | - 농업경영, 생활 등 측면에서 안정기에 접어든 농가 |

자료: Johnson, S. E. et al.2001. Exporing the Concept of Farming Career

재인용: 마상진(2008)외,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을 신규
청년농부의 특성에 기초해 유형별로 체계화 해 지원하는 원클릭 맞춤형 통합지원체
계 구축

- 농업 창업 관련 지원정책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규 청년농부의 특
성에 기초한 수준별 통합형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체계 구축
- 특히 경기도 자체사업과 중앙정부를 포함한 타기관의 사업을 통합해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관심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
및 농업창업 지원체계 구축
- 경기도 차원에서 농업 창업 관련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예비농업창업자들이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농업 창업 관련 교육,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이
수하고, 농업 창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35) 자세한 내용은 2장의 2.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 참조

□ 교육, 용자, 체험 등 위주의 지원에서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 현행의 농업창업 지원 방식은 교육, 체험, 용자 등 위주로 진행

- 마상진(2008)등은 농업창업의 진입장벽을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 기후 및 환경 등으로 구분해 분석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은 대부분 농업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농업창업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
- 경기도 팜세어의 경우 창업예정자로 하여금 직접 농업경영을 해 본 이후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을 직업으로 한 사전적 농업창업을 체험하기에는 규모가 크게 미흡
- 시·군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또한 농촌 현장에서 농업 및 농촌 체험을 통해 농업 창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예비농업창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사전적 농업창업을 체험하기에는 미흡

〈표 4-4〉 농업창업시장의 진입장벽

| | |
|---------|--|
| 자본 | 토지, 운영자금, 농기계구입 등 농업경영 관련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 |
| 전문성 | 영농기술, 판매 포함 경영기술 등 |
| 시장 | 시장의 개방성 및 접근성(각종 농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접근성) |
| 사회네트워크 | 전문가, 동료, 판매조직, 지역주민 등과의 관계 |
| 기후 및 환경 | 냉해, 가뭄, 홍수, 병해충 등 |
| 기타 | 가족/배우자 지원, 문화 및 의료복지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 막연한 불안감 등 |

자료: 마상진(2008)외,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수정

- 농업은 타산업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불확실성 위험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창업은 도시창업에 비해 높은 시장 진입장벽 존재 가능성 내재³⁶⁾
 - 농업창업은 일반창업에 비해 냉해, 홍수, 병해충 등 자연재해의 불확실성 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창업시장 진입장벽 존재
 - 일부 농촌 출신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의 젊은 인력은 성장과정에서 농업 및 농촌에

36) 도시창업은 도회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창업을 의미함.

-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창업에 비해 높은 막연한 불안감 존재 가능성 내재
- 높은 지가(地價),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복합 확대 등으로 농업창업도 도시창업 못지 않은 높은 창업비용 소요
- 농업창업이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 및 불확실성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정착 및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의 창업지원시스템 강화 필요
-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유형의 창업은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였거나 창업 이전 동일 업종에서 상당기간 동안 경험을 축적한 이후 창업이 이루어진 반면 농업창업은 이러한 체험 및 경험 축적 기회 미흡
 - 현행의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은 상당부문 교육, 훈련, 농장연수 중심의 체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R&D지원, 융자지원, 주택 등 생활지원 등으로 구성
 - 농업창업은 일반적인 창업과 달리 사전적 경험이 미흡한 가운데 이루어지면서도 보다 많은 불확실성 위험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확실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현장경험을 강화한 방향의 창업지원시스템 확대 개선 필요
- 현행의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의 체계화와 함께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종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서 사전적인 현장체험 이후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의 완결형의 체계적인 농업창업지원시스템(가칭) 구축
- 현행의 농업창업지원시스템의 체계화: 관심단계 ⇒ 준비단계 ⇒ 실행단계로 체계화해 예비 청년농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원클릭 농업창업지원시스템 운영
 - 확대 개선 방향: 농업창업 실행단계까지 마친 예비 청년농부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자신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경험을 한 이후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농업창업지원시스템 확대 개선
- 완결형 농업창업지원시스템(가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비청년농부는 이를 통해 일정 정도의 농업창업을 위한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업창업의 자립기반도 강화할 것으로 추정
-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농업인이 500평 내외 규모의 시설농업을 운영할 경우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간 3천만원 내외의 순이익 발생 추정
 - 고흥군 관계자는 “맞춤형 청년 창업농장 사업”에 참여한 예비청년농부는 재배 기술 습득은 물론 연간 2천만원 내외의 소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예비청년농부가 3년 내외 기간 동안 완결형 농업창업지원시스템에 참여해 농업경영을 체험할 경우 기술의 현장 적용 경험 습득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창업을 위한 목돈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완결형 농업창업지원시스템(가칭) 운영은 농업창업 촉진을 위한 단순한 용자지원에 비해 농업경영의 자립기반(현장경험(기술, 경영 등) + 목돈마련 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판단

□ 작목반 등 공동체와 연계된 농업창업지원체계 구축

- 모든 창업 활동이 대부분 유사하겠지만, 특히 농업의 경우 성공적인 창업 여부는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애로사항 해결이 중요한 과제
 - 농산물 생산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형화되고 시스템화 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병해충,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 위험에 내재된 가운데 진행되는 복합적인 과정
 -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의 경험자 및 전문가의 상시적인 도움 필요
- 농산물의 판로 또한 농업이 규모화, 전문화 위주로 발전하면서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
 - 농산물 유통구조 또한 규모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소농이 독자적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
 -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경험축적이 미흡한 신규 농업인이 독자적으로 직거래시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직거래 거래물량 또한 전체 농산물 유통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
- 신규 젊은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역의 작목반 등의 공동체와 연계된 방향으로 추진
 - 방안1: 경기도의 품목별 거점 주산지와 연계된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품목별 주산지의 생산자 단체와 연계
 - 방안2: 지역별로 분산해서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되 먼저 지역의 작목반 등과의 연계 및 편입 여부 가능성을 검토해 지역별로 설치
 - 방안3: 간척지를 활용해 대규모 농업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기술원 및 농업 관련 대학 등과 연계된 R&D지원체계 및 자체적인 작목반 구축 등의 가능성을

3)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 비전

○ 비전: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부 육성 선도 지역

-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청년농부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 확대
- 마상진(2017)은 2015년 기준 40세 이하 농가경영주가 3개 농촌마을당 1농가에 불과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농이 신규로 유입되어야만 그나마 현 수준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분석³⁷⁾
- 농촌의 인구자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전략 필요
- 수도권은 국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경기도는 수도권 가운데 다수의 농촌지역 포함
- 경기도의 이러한 유리한 입지배경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의 젊은 인력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농업 관련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
- 경기도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도시의 젊은 인력 가운데 농업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인력을 농업창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청년농부로 육성시켜 경기도 및 비수도권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역할 강화 필요
- 따라서 본 과제의 비전을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부 육성 선도 지역”으로 설정

□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 목표

-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크게 “경기도내 청년농부 육성사업(가칭)”과 “한국 청년농부 육성사업(가칭)”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 “경기도내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젊은 인력을 청년농부로 육성시켜 경기도내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로 추진
 - “한국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

37)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연구원.

해 도시의 젊은 인력을 청년농부로 육성시켜 국내 전역의 농촌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로 추진

-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의 목표는 중·단기 매년 100명, 장기 매년 500명의 추가적인 청년농부 육성으로 설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의 농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0명의 추가적인 신규 농업인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 이를 토대로 2015년 기준 전국 대비 경기도 40세 미만 청년농의 비중이 10.8%인 점을 감안해 경기도의 청년농부 육성사업의 목표를 매년 100명으로 설정
 - 100명 가운데 30명은 경기도 자체 추진사업, 70명은 농식품부와 연계한 한국 청년농부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
 - 매년 100명의 농업창업을 전제로 한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300개의 시설농업 중심의 임대농장사업 추진(임대농장의 임대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경우 1개 임대농장운영을 통해 3년 기간 동안 1명의 청년농부 육성) 필요
 - 청년농부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인구가 국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1,000명의 추가적인 청년농부 육성 목표치 가운데 절반인 500명을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사업 확대

〈표 4-5〉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 | |
|--------|---|
| 비전 |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부 육성 선도 지역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기)매년 100명의 농업창업을 전제로 한 청년농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의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300개의 시설농업 임대농장 설치 - 30명은 경기도 자체 추진, 70명은 농식품부와 연계해 추진 • (장기) 중·단기 청년농부 육성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500명의 추가적인 청년농부 육성으로 확대 |
| 세부추진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경기도 대표품목 중심의 거점지역별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경기도와 시·군이 연계한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3. 세부추진과제

1) 수준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농업창업 촉진 및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마상진(2017)은 청년창업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자본지원, 기술지원, 사회적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농업 관련 R&D기관, 대학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정책 소개(표 4-6참조)³⁸⁾
 - 경기도 또한 중앙정부와 매칭하거나 경기도 독자적으로 팜세어, 공공임대농장, 농촌 임대주택, 영농정착지원, 농지구입 및 시설·경영자금 등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융자), 청년농부펀드 등 사업 추진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을 포함한 민간단체 등 또한 청년농부 육성 및 농업창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교육, 귀농귀촌 관련 교육 등 추진
 - 청년농부를 육성하고,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사업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주체의 책임성³⁹⁾, 교육에서 현장 정착까지의 연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표 4-6〉 정부의 창업농 지원 정책사업

| 장애 요인 | 창업단계 | |
|----------|--|--|
| | 준비 | 정착초기 |
| 자본 |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신보 신용지원, 2030세대 농지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
| 기술 | 한국농수산대학, 농고 및 농대 교육, 예비귀농교육 | 영농정착기술교육, 선도농가실습,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교육, 컨설팅) |
| 사회 | 귀농귀촌종합상담, 귀농닥터, 귀농인의 집,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귀농인 주택지원 |
|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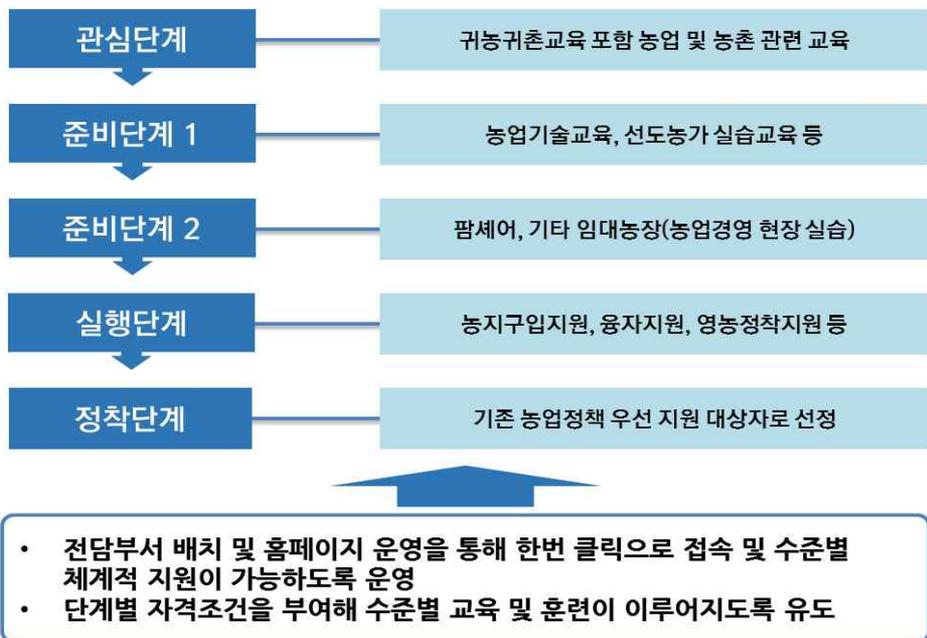
자료: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8)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9) 지원 사업 주체의 책임성은 교육 주관 기관이 귀농귀촌 혹은 농업창업을 목표로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해당교육 이수 이후 명확한 방향 제시 혹은 관련된 정책사업과의 연계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 경기도를 포함해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부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관심단계 ⇒ 준비단계 ⇒ 실행단계 ⇒ 정착단계 등으로 체계화 해 추진
 - 관심단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경기도 자체사업이 미흡할 경우 중앙정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준비단계1: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기술 교육, 선도농가 실습교육 등 지원(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등과 연계해 사업 추진)
 - 준비단계2: 준비단계1의 과정을 이수한 농업창업 이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구축한 임대농장(팜셰어, 향후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500평 내외 규모의 시설농업 임대농장 등)에서 직접 농업경영을 경험하도록 지원
 - 실행단계: 2030농지지원, 융자지원, 영농정착지원 등 중앙정부를 포함한 청년농부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원
 - 정착단계: 기존 농업정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정착 지원

<그림 4-1> 수준별, 단계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 방안



- 청년농부 육성 관련 전담부서 배치와 함께 홈페이지를 구축해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거쳐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체계화 추진
 - 청년농부 육성 관련 전담부서 설정과 함께 홈페이지 구축
 - 청년농부 육성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사업, 중앙정부 및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단계별로 구분해 홈페이지에 배치
 - 단계별 지원 사업에 대한 자격조건을 부여해 예비청년농업인의 체계적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비청년농업인이 한 번의 클릭으로 단계별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고,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거쳐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운영

2)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 확대, 경기도의 지리적 이점 등을 활용해 경기도가 국내 청년농부 육성의 중요한 통로 역할 담당 필요
 - 도시와 농촌의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청년농부 육성은 도시지역의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 수도권은 국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경기도는 대규모 농업지역 및 활용 가능한 간척지 등 보유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자신의 생활권 주변에서 농업을 미래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한 교육, 훈련, 농업경영 경험 등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의 농촌에 귀농 혹은 귀촌해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농업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농업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청년농부를 육성하고, 이들 청년농부가 국내 전역으로 진출해 농업창업 활성화 및 한국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농업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소재 젊은 층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고, 농업창업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한국농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청년농부가 되도록 육성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특히, 일반적인 교육 및 훈련 차원을 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에서 농업창업 관련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경험을 한 이후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사업추진 방안은 먼저 국공유지, 간척지 등을 활용해 1개 시설당 500평 내외 규모의 시설농업지역 구축
 - 사업대상지역: 수도권 대도시 인접지역 국공유지, 간척지 등
 - 임대농업시설 규모: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1개 시설당 500평 규모의 200개 내외 시설농업시설 구축⁴⁰⁾
- 농업창업을 통해 청년농부로 육성이 가능한 예비청년농업인 모집
 - 신청자격: 농업 관련 기초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예비청년농업인
 - 사업 참여 예비청년농업인은 반드시 사업 완료 이후 경기도 혹은 국내 기타 지역에서 농업창업이 전제되어야 함.
- 사업에 참여한 예비농업인은 실질적인 농업경영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농업 관련 대학, 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원시스템 구축
 - 간척지, 국공유지에 시설농업시설을 구축해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사업은 기존의 농가와 이격되어 있다는 점에서 농업경영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기존 농가와의 연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예비농업인이 농업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농업을 경영할 경우 다양한 불확실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내재
 - 따라서 농업 관련 대학,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한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별 전문가와 사업에 참여한 예비농업인 간의 1:1 멘토-멘티시스템을 구축해 지원
- 사업에 참여한 예비농업인이 주축이 된 작목반, 연구모임 등 구성을 유도하고, 자립능력 향상 및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차원에서 생산량의 30% 내외를 경기도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서 매입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혁신적인 농업창업모델 발굴 및 발전, 효율적인 판로개척 등 차원에서 자체적인 작목반, 농업연구모임 등을 구축해 운영되도록 유도

40) 최근 2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예비농업인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농업 창업규모는 300~500평 29.4%, 500~1,000평 32.8%로 조사됨. 따라서 임대농장 시설규모를 중위 값에 해당하는 500평으로 산정(3장 설문조사결과 참조)

- 농업경영의 자립능력 향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생산량의 일정 비율(30% 내외)을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
- 임대농장의 임대조건은 임대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정하고, 임대료는 창업조건을 전제로 면제 혹은 시가의 50% 정도로 산정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2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한 결과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설농업 농업인과의 전화 인터뷰 결과 역시 3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설문조사 결과 임대조건은 농업창업을 전제로 한 임대료 면제 46.4%, 임대료 50% 감면 32.8%로 나타남. 따라서 임대료는 면제 혹은 50% 감면하되 임대기간 만료 이후 농업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제 혹은 감면된 임대료 환원을 요구 방안 모색 필요
- 동 사업은 청년농부 육성사업을 교육 및 훈련, 자금지원 위주에서 농업창업을 촉진하고, 예비창업농의 자립기반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간척지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
 - 임대농장을 활용한 농업창업 지원은 농업경영 경험 축적은 물론 임대농장 사업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소득창출도 가능해 농업창업의 자립기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경기도 서해안지역 간척지의 경우 농업 기반시설 구축이 미흡해 농업용수 공급 등 시스템 구축이 미흡함. 간척지 개발 목적이 농업생산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농업용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모색 필요

3) 경기도 대표품목 중심의 거점지역별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경기도내 차체적인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경기도 시설농업 특성과 연계된 임대농장사업 시스템 구축 추진
 -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은 청년농부가 농업창업을 통해 경기도내에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
 - 경기도의 권역별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과 연계된 임대농장시설을 구축해 경기도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부로 육성
- 추진 방안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설농업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 생산지역을 중

심으로 시설농업 임대농장시설을 구축해 임대농장사업 추진

- 임대농장시설 구축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설농업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과 관련된 연합회, 작목반 등과 연계해 사업추진 방안 모색
- 먼저 경기도를 4~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대표품목 선정
- 대표품목이 선정되면, 해당지역 품목과 관련이 있는 작목반 등과 연계해 대표하는 품목 위주의 임대농장시설 구축
- 임대농장시설은 국공유지를 활용해 신축하거나 유휴시설을 인수 혹은 임대해 수리하여 재임대하는 등 현지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하되 500평 내외의 규모로 추진⁴¹⁾
- 해당지역 작목반과 연계해 예비창업농 모집을 통한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추진

○ 임대농장시설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현지의 작목반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운영

- 품목별 현지 작목반과 연계해 임대농장 사업 규모, 임대농장 사업 참여자 선정 등 진행
- 임대농장 사업에 참여한 예비농업인은 작목반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해 기존 회원과 생산에서 판로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협력(멘토와 멘티 관계 형성) 유도
- 다만, 예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생산량의 일정 규모(30% 내외)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비농업인의 역량에 기초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

○ 예비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시설농업시설 임대방식은 3년 기한으로 하되, 예비농업인이 현지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농장시설 매입 유도

-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창업을 전제로 한 면제 혹은 50% 감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를 통해 선택
-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농장 사업에 참여한 예비농업인이 농장시설을 매입하도록 유도(매입할 경우 할인을 등을 적용한 특혜 제공)
- 예비농업인이 임대농장 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개보수하여 새로운 예비농업인에게 임대 추진

41) 국공유지 활용가능성, 유휴시설농업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4) 경기도와 시·군이 연계한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경기도와 경기도내 도농복합도시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내 도농복합도시의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임대농장사업 추진
 - 시·군에 대한 사업 배정은 시·군별 주요 품목 생산단지 인근의 은퇴농 혹은 고령농 소유의 유휴시설 인수 가능성, 현지 작목반 및 시·군의 참여 의사 등을 고려해 추진
- 사업추진 방식은 최대한 은퇴농 혹은 고령농 소유의 유휴설비를 활용하고, 시설 농업 소유주와 예비농업인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농업인이 비록 농업 관련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창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은퇴농 혹은 고령농 소유의 유휴설비를 활용할 경우 농업창업 비용 절감은 물론 농업경영 경험이 풍부한 시설소유주와 예비창업농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킴으로써 농업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⁴²⁾
- 경기도와 시·군이 연계한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 시·군이 주도하고 경기도가 참여하는 형태의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구축
 - 시·군이 주도한 가운데 지역에 소재한 시설농업 유휴시설 발굴: 시·군과 유휴시설 소유주 간의 임대계약 체결(최초 5년, 연기가능 등 조건)
 -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유휴시설 개보수 추진
 -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예비창업농 발굴: 예비창업농은 농업기술교육, 선도농가실습 등을 모두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자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창업품목 또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된 방향으로 창업 유도
 - 선발된 예비창업농과 시설소유주 간의 멘토-멘티 관계 형성
 - 선발된 예비창업농이 임대농장에서 농업경영을 시작할 경우 농업경영 시작부터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 예비창업농을 지역의 작목반에 가입시켜 판로 및 농자재 외상구매 지원

42) 유휴시설 소유자와 예비창업농 간의 멘토와 멘티 관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안 적극 모색 필요

- 대부분 예비창업농의 경우 농업경영을 위한 초기자본이 부족한 것이 특징
 -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는 작목반 가입을 통해 외상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 외상구매 된 농자재 비용은 농작물 수확 이후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지원형태를 초기 경기도 및 시·군, 농업시설 원소유주, 예비창업농 간의 3자 관계에서 농업시설 원소유주와 예비창업농의 2자 관계로 발전 추진
- 최초 임대계약 5년 기간 동안 예비창업농과 시설소유주 간의 지속적인 협력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년농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예비창업농은 시설원주인과 협의를 거쳐 시설 재임대, 독립, 기존시설 매입 등의 형태로 발전 유도
 - 시설농업시설 임대와 관련해 시설소유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지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 건의

4.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투융자계획

1)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투자 타당성 분석

- 투자 및 사업타당성 분석은 재무적 타당성(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분석과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analysis)분석으로 구분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량적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손익계산과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및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 청년농부육성시스템(가칭)의 경우 청년 창업을 위한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경제적 타당성 요인을 추가해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수입을 판단하여 타당성 검토
- 청년농부육성시스템은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며, 임대농장사업의 경우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재무타당성을 기본으로 한 타당성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년농부육성시스템 사업성분석은 2019~2033년(15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

(1) 비용 산정

- 비용은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을 위한 토지 임차비와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 비용(농기계+시설), 그리고 농자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임차비 및 시설비

- 부지임차료는 제1차에서 3차 사업에 걸쳐, 1차에 100개의 임대농장을 추진하고, 2차에 100개, 3차에 100개의 공공임대농장조성에 따른 농장부지의 임차 비용으로 총 612.7 백만원이 소요될 전망
 - 매년 100개의 임대농장은 경기도 자체추진 30개, 70개는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추진함. 따라서 전체 300개 임대농장 중 90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210개는 농식품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본 투자타당성 분석에서는 경기도와 농식품부 추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300개 임대농장의 투자 타당성을 고려함.
 - 부지임차료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 매년 5%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설정하여 임차비용에 반영하고, 3년 이후에도 임차료는 지속적으로 발생함.
 - 임대방식은 최대 3년 기한으로 설정하지만, 예비농업인이 현지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농장시설 매입을 유도하고, 3년이 지난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임차료는 시설의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및 시설이용에 대한 기회비용 차원에서 비용으로 설정함.
- 시설비는 300개소의 시설비로서 3년 기간 동안 총 30,150백만원이 소요될 전망

〈표 4-7〉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임차료 및 시설비 추정

| 구분 | 소요예산(백만원) | | | | 사업규모 | 비고 |
|-----------|-----------|--------|--------|--------|-------|--|
| | 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 부지 임차료 | 612.7 | 199.2 | 204.2 | 209.3 | 300개소 | 1,200원/㎡ × 1,660㎡ × 3년 × 100개소 = 약 597.6백만원 |
| 시설비 | 30,150 | 10,050 | 10,050 | 10,050 | 300개소 | 67천원/㎡ × 1,500㎡ × 3년 × 100개소 = 약 30,150백만원 |

□ 농자재비

-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임대농장의 농자재비는 운용자금이 부족한 청년농부에게 필요한 자재비로서 시설채소 농자재비를 비용부문에 포함시켰고, 농자재비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설채소 평균 비용을 활용함
- 경기도 시설채소의 농자재비를 1,660㎡(500평) 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14개 품목의 시설채소 평균 농자재비는 1,660㎡(500평)당 6,991천원으로 추산됨
- 따라서, 300개 시설의 총 농자재비는 2,097.3백만원으로 환산됨

〈표 4-8〉 경기도 시설채소의 품목별 소득

(단위 :원/10a)

| 작목 | 총수입 (원) | 농자재비 ¹ (원) | 소득 (원) |
|----------|--------------|--------------------------|------------|
| 수박(반축성) | 6,088,438 | 1,648,491 | 4,439,947 |
| 시설참외 | 8,801,399 | 2,176,119 | 6,625,280 |
| 딸기(반축성) | 20,855,387 | 8,233,266 | 12,622,121 |
| 오이(반축성) | 10,539,095 | 4,906,311 | 5,632,784 |
| 오이(억제) | 8,036,494 | 2,682,194 | 5,354,300 |
| 시설호박 | 13,731,139 | 5,450,572 | 9,069,552 |
| 토마토(반축성) | 15,362,319 | 4,415,667 | 10,946,652 |
| 방울토마토 | 12,831,606 | 6,431,935 | 9,399,671 |
| 시설가지 | 9,680,093 | 4,956,271 | 4,723,822 |
| 시설시금치 | 3,282,594 | 1,445,942 | 1,836,652 |
| 시설청경채 | 4,067,815 | 2,274,663 | 1,793,152 |
| 시설돌나물 | 12,206,391 | 5,189,119 | 7,017,272 |
| 시설상추 | 7,969,001 | 4,156,870 | 3,812,132 |
| 시설부추 | 10,928,417 | 4,993,600 | 5,934,816 |
| 평균 | 10,312,870.6 | 4,211,501 | 6,372,011 |

주 1 : 농촌진흥청의 경영비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농자재비로 분류하여 비용에 포함시킴
자료 : 농촌진흥청(2017.8), 「2016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내용 중 경기도 자료 일부 발췌

<표 4-9> 경기도 시설채소의 평균 소득

(단위 : 천원/1,660㎡)

| 작목 | 총수입(천원) | 농자재비(천원) | 소득(천원) |
|---------|----------|----------|----------|
| 시설채소 평균 | 17,119.3 | 6,991.0 | 10,577.5 |

□ 농업시설 감가상각비

-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시설의 사용기간은 10년이며, 감가상각비는 정률법(straight line)을 적용함
- 농업시설은 감가상각 기간 이후에도 일부 보수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따라서 보수율 50%를 적용, 감가상각비의 50%를 유지관리비용으로 판단하여 유지비용으로 계산함

(2) 수입 산정

□ 시설채소 판매 수입

- 공공 임대농장으로서 수입은 시설채소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시설채소 평균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추산함
- 경기도 시설채소 평균 수입을 고려할 경우 시설농장 1개소 면적인 1,660㎡(500평)당 17,119.3 천원의 총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임대농장의 1개소당 총수입에서 농자재비를 제외하면 10,577.5천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됨

(3) 사업성 분석

-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으로서 임대농장의 사업성분석은 2019~2033년(15년)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함

- 3년 이후 임대가 끝나고 청년농부가 구입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 10년을 고려하여 투자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표 4-10>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 운영비용(2019-2033)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임차비 | 시설감가상각 및 유지관리비 | 농자재비 | 비용 계 |
|------|---------|-------------------|----------|----------|
| 2019 | 199.2 | 1,005 | 699.1 | 1,903.3 |
| 2020 | 209.2 | 2,010 | 1,398.2 | 3,617.4 |
| 2021 | 219.6 | 3,015 | 2,097.3 | 5,331.9 |
| 2022 | 230.6 | 3,015 | 2,097.3 | 5,342.9 |
| 2023 | 242.1 | 3,015 | 2,097.3 | 5,354.4 |
| 2024 | 254.2 | 3,015 | 2,097.3 | 5,366.5 |
| 2025 | 266.9 | 3,015 | 2,097.3 | 5,379.2 |
| 2026 | 280.3 | 3,015 | 2,097.3 | 5,392.6 |
| 2027 | 294.3 | 3,015 | 2,097.3 | 5,406.6 |
| 2028 | 309.0 | 3,015 | 2,097.3 | 5,421.3 |
| 2029 | 324.5 | 2,512.5 | 2,097.3 | 4,934.3 |
| 2030 | 340.7 | 1,507.5 | 2,097.3 | 3,945.5 |
| 2031 | 357.7 | 1,507.5 | 2,097.3 | 3,962.5 |
| 2032 | 375.6 | 1,507.5 | 2,097.3 | 3,980.4 |
| 2033 | 394.4 | 1,507.5 | 2,097.3 | 3,999.2 |
| 계 | 4,298.5 | 35,677.5 | 29,362.2 | 69,338.2 |

-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운영 사업기간(2019~2033년) 동안 발생하는 총 비용은 69,338.2백만원으로 추산됨
 -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 운영을 위한 임차비와 시설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농자재비를 포함한 총 비용임
 - 임차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5%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 최대 임차기간 3년 이후에, 청년농부 창업자가 구입을 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임차비용을 계산함

- 감가상각의 경우 시설감가상각 10년 기간 이후에는 보수율 50%를 고려하여 감가상각비의 50%를 수리 유지비용으로 계산하여 반영함

○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운영 사업기간(2019~2033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은 시설채소 판매수입을 편익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시설채소 판매수입은 1개소 면적인 1,660㎡(500평)당 17,119.3천원의 총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300개 임대농장으로부터 총 71,904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됨

- 시설채소 판매수입은 품목에 따라 연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나, 2017년 기준 경기도 시설채소 사업의 평균 수입이 사업기간 동안에도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함

<표 4-11>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 편익(2019-2033)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시설채소 판매수입 | 편익 계 |
|------|-----------|--------|
| 2019 | 1,712 | 1,712 |
| 2020 | 3,424 | 3,424 |
| 2021 | 5,136 | 5,136 |
| 2022 | 5,136 | 5,136 |
| 2023 | 5,136 | 5,136 |
| 2024 | 5,136 | 5,136 |
| 2025 | 5,136 | 5,136 |
| 2026 | 5,136 | 5,136 |
| 2027 | 5,136 | 5,136 |
| 2028 | 5,136 | 5,136 |
| 2029 | 5,136 | 5,136 |
| 2030 | 5,136 | 5,136 |
| 2031 | 5,136 | 5,136 |
| 2032 | 5,136 | 5,136 |
| 2033 | 5,136 | 5,136 |
| 계 | 71,904 | 71,904 |

-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5.5%, 분석기간 2019~2033년까지 15년 기간 동안의 수지예산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이 개시된 2019년 이후 2029년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며, 이는 토지 외에 농업시설투자 비용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추진 이후 청년농부의 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함

〈표 4-12〉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연차별 수지예산표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비용 | 편익 | 손익 |
|------|----------|--------|-------|
| 2019 | 1,903.3 | 1,712 | -191 |
| 2020 | 3,617.4 | 3,424 | -193 |
| 2021 | 5,331.9 | 5,136 | -196 |
| 2022 | 5,342.9 | 5,136 | -207 |
| 2023 | 5,354.4 | 5,136 | -218 |
| 2024 | 5,366.5 | 5,136 | -231 |
| 2025 | 5,379.2 | 5,136 | -243 |
| 2026 | 5,392.6 | 5,136 | -257 |
| 2027 | 5,406.6 | 5,136 | -271 |
| 2028 | 5,421.3 | 5,136 | -285 |
| 2029 | 4,934.3 | 5,136 | 202 |
| 2030 | 3,945.5 | 5,136 | 1,191 |
| 2031 | 3,962.5 | 5,136 | 1,173 |
| 2032 | 3,980.4 | 5,136 | 1,156 |
| 2033 | 3,999.2 | 5,136 | 1,137 |
| 계 | 69,338.2 | 71,904 | 2,566 |

- 2019년부터 2033년 까지 대상기간 동안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사업 총편익(현가기준)은 71,904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총비용(현가기준)은 69,338.2 백만원으로 청년농업 육성시스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B/C

Ratio)는 1.04로 추정됨

- 사업 기간 동안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2,566백만원이 발생하며, 본 사업의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14.3%로 사회적 할인율 5.5% 보다 높아 투자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13〉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 | |
|--------------------|------------|
| NPV(순현재가치) | 약 2,566백만원 |
| IRR(내부수익률) | 14.3% |
| B/C Ratio(비용편익 비율) | 1.04 |

2)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사업 투자계획

-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사업은 손익분기점이 사업개시 이후 10년차에 달성이 되어, 임대기간 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할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은 청년농부 육성지원시스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료와 시설부문과 농자재비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부담을 하되, 자부담 비율을 30%로서 나머지 70%는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청년농부 육성시스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3년 사업 기간 동안 소요되는 도비는 총 77억 8천 1백만원 규모이며, 국비는 181억 6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전체사업의 30%를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70%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의 비용 추계임

<표 4-14> 청년농부 육성시스템의 임대농장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 연도 | 투자계획 (백만원) | | | | 연도별 투자 계획 | | | |
|-------|---------------|--------|-------|----------|--------------|----------|----------|----------|
| | 임차료 | 시설비 | 경영비 | 계 | 자부담 (30%) | 국도비(70%) | | 계 |
| | | | | | | 도비(30) | 국비(70) | |
| 2019 | 199.2 | 10,050 | 699 | 10,948.2 | 3,284.5 | 2,299.1 | 5,364.6 | 10,948.2 |
| 2020 | 204.2 | 10,050 | 1,398 | 11,652.2 | 3,495.7 | 2,447.0 | 5,709.5 | 11,652.2 |
| 2021 | 209.3 | 10,050 | 2,097 | 14,453.3 | 4,336.0 | 3,035.2 | 7,082.1 | 14,453.3 |
| 계 | 612.7 | 30,150 | 4,194 | 34,956.7 | 11,116.2 | 7,781.3 | 18,156.2 | 34,956.7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결론 및 정책제안

□ 농촌기능 유지 및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부의 농업창업 지원 확대 필요

- 젊은 층의 농촌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이 위기상황에 직면함과 동시에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
 - 마상진(2017)의 연구에 따르면 40세미만 젊은 농부가 3개 농촌마을 당 1명에 불과하며, 농가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농촌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농업인 부족 문제갈수록 심화
-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규 농업인의 농촌유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규모의 농업창업을 통한 젊은 층의 신규농업인 유입은 미흡
 - 일반적으로 창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한 유형으로 표현되지만, 농업창업의 경우 “고위험”에 해당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이 확대되면서 농업창업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농업창업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짐.
- 젊은 층의 농촌유입을 확대시켜 농촌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농업창업 촉진을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농업창업 지원 확대 필요
 -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청년농부의 농촌 유입 확대를 위해 초기정착비용 지원 등 직접지불 위주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한국도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육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청년농부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기생활비 지원 등 직접지불 유형의 지원도 확대

□ 청년농부의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한 농업창업 지원 방식 개선 필요

-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농부 유입 및 농업창업 지원 방식이 상당부분 교육, 자금

지원, 정착지원 위주로 추진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창업 지원 유형은 농업기술교육, 현장체험(선도농가 실습지원 포함), 용자지원, 판로지원 등으로 구성
- 최근 경기도가 예비농업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해 본 이후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경기팍세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가 미흡하다는 단점 대두

○ 농업창업의 높은 초기투자비용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의 높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농업창업의 성공확률도 높이는 방향의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 교육, 자금지원 위주의 농업창업 지원 방식에서 예비농업인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규모의 농업경영을 직접해본 이후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업창업의 실패확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창업 지원 방식 개선 필요
- 전남 고흥의 경우 방치된 유휴 시설농업시설을 개보수해 예비농업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해 예비농업인이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경험해 본 이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추진
- 고흥군이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농장사업은 예비농업인이 초기 투자비용이 없이 농업창업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2,000만원 내외의 소득 발생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

□ 경기도형 임대농장사업 도입을 통해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활성화 필요

○ 경기도 농업창업지원시스템 체계화 추진

-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창업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예비농업인이 체계적으로 창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농업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시스템(가칭)” 구축 필요

○ 청년농부 육성을 촉진하는 농업창업 임대농장사업 추진 필요

-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규모(1인당 500평 내외)의 시설농업 위주의 임대농장사업을 추진해 청년농부 유입 촉진
- 임대농장시설을 활용한 청년농부 육성 방향은 수도권 소재 인구 비중, 경기도의 지리적 특징 등을 고려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 방안과 경기도내 청년농

부 육성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 방안은 농식품부와 연계하고, 간척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향의 추진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 서해안지역에 소재한 간척지의 경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 내재
 - 다만, 간척지 자체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농부 육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 농업용수 공급 기반 조기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내 청년농부 유입을 목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경기도내 주요 시설농업 생산지역 및 시·군 중심의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는 방안 모색
 - 주요 시설농업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경기도를 4~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시설농업 주요 생산품목과 연계해 추진
 - 시·군 중심의 추진: 경기도와 시·군이 주도해 은퇴농 혹은 고령농이 소유한 유휴농업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참고문헌

- 고흥군(2017). “2017년 청년 창업농장 육성사업 추진계획”.
- 국민농업포럼(2016). 『2016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김정섭(2016)외.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2016)외.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사)환경농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농림축산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1.)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2.)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4.12.)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06.23.)
-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2016).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2017),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2017)”.
- 농림축산식품부(2018),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모집안)”.
- 농촌진흥청(2017). 『2016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 마상진(2008)외.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2016).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삼락농정포럼 발제문.
- 마상진(2016)외.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2017)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수행(2017)외.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 전라북도(2017). “전라북도 디딤돌청년협업농장 참여인력 선발공고”.

한국갤럽(2016).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한국농업교육협회(2015).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일본의 인정농업인·청년 창업농 지원정책 해외사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refarmgg.or.kr>)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일본 정책금융공고 홈페이지 (<https://www.jfc.go.jp>)



Abstract

Suggestions to Support Rural Youths in Gyeonggi-Do

Government has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for promoting vitalization of rural areas. But rural areas have collapsed due to the reduced inflow of young population. As of 2016, The percentage of aging over age 65 was 55.5%(nationwide), 49.6%(Gyeonggi-Do) The ratio of agricultural workers under age 40 is 2.7%(nationwide), 2.9%(Gyeonggi-Do). Ma Sangjin(2017) estimates that only one young farmer(under the age of 40) live in three rural villages, and if current trend continues, the ratio of young farmers will decrease to 1/4 of current level in 2025.

In the field of agricultur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in young and middle-aged farmers due to the wealthy farmers. But it is not easy for young farmers to enter rural areas through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because of the initial difficulties.

To reduce the initial difficulties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and to establish a systematic agricultural enterprise support system that minimizes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low of young farmer into rural areas and to find ways to promote rural yo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system for rural youth and to promote the policy of venture farme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way of cultivating rural youth through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in the direction of current education, training, financing, etc. In order to increase the inflow of rural farmers into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gricultural business support system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in agricultural area.

The example of Goheung-gun not only enables the preliminary farmers to experience the start-up of the farm without burdening the initial investment cost, but

also minimizes the uncertainty about the venture farm and expects to generate more than 20 million won in annual income.

This study suggested basic direction for the beginning rural youth Nurturing system in Gyeonggi-do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yeonggi-do type rental farm business. Establishment of "one-click customized young farmer cultivating system" to systemize the agricultural enterprise support system, which afford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atically for the pre-farmers. "Agricultural venture rental farm business promotion" is needed for rural youths who can select agriculture as a profession and can engage in agriculture.

The direction of youth farmer promotion needs to be pursued in two directions. The promotion of youth farmers can be considered the geographic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 Foster projects for the inflow of young farmers in Gyeonggi-do should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major items by region and utilize the idle agriculture facilities owned by the cities and countries.